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730-01

2021. 10.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황윤재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박성진 | 연구위원 | 해외 논의 집필

최재현 | 연구원 | 국내외 논의 집필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황 윤 재 (연구 위원)
연구참여자: 박 성 진 (연구 위원)
최 재 현 (연구 위원)

연구 목적

- 이 보고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내 대응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됨.

연구 결과

- UN은 2015년에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했으며, SDGs의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UN 사무총장은 관련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또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모든 사람을 위한, 즉, “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가 될 것을 촉구하면서, 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 논의(Global dialogue),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 독립 논의(Independent dialogue) 등을 통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 UN은 국내 논의를 위해서 각국이 회원국별로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 UN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국내 논의 의장으로 선정하고 국내 논의를 추진하였음. 2021년 3월 30일에 제1차 논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에 개최한 5차 논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총 5차례의 국내 논의를 개최함. 총 5차례의 국내 논의 과정에서 연령, 성별, 분야 등을 고려하여 총 108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였음.
- 제1차 국내 논의(2021. 3. 30.)에서는 향후 진행될 국내 논의 주제와 국내 논의의 의의, 국

내 푸드시스템 진단 및 문제점, 푸드시스템의 정의·목적 등이 논의되었음. 제2차 국내 논의(2021. 4. 22.)는 ‘식량안보’ 제3차 국내 논의(2021. 4. 28.)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제4차 국내 논의(2021. 5. 7.)는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제로 하여 개최됨. 제5차 국내 논의는 그간의 4차례 국내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개최됨.

- 각국의 국내 논의와 기타 다양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전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Pre-Summit), 2021년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Summit)가 개최됨.
- 사전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본부(이탈리아 로마)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진행됨. UN의 193개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민간단체, 농업인, 농식품 산업계 등이 참석함. 우리나라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상 발언을 통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우리 푸드시스템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 정상회의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인 2021년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개최됨.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해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의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함. 우리 정부는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료급 연설을 통해 최근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으로 소개함.
- 회원국, 국제기구 등은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commitments)을 발표하고, 유엔 차원의 이행점검 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는 5차례의 국내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국제기구, 기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총 108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 및 수렴하는 성과를 달성함.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 등 먹거리 관련한 기업 등 업계 담당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업계의 푸드 시스템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함. 또한 2021년 7월과 9월에 개최된 UN의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 이전에 국내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비교적 짧은 일정,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논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함.

- 향후 국내 정책이 국내 논의와 사전 정상회의 및 정상회의의 성과와 함께 국내 논의 과정에서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추진된다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내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주요 연구 내용 3

제2장 국내외 푸드시스템 논의 배경과 이해관계자 정책 수요

1. 국제 사회 논의 배경과 경과 5
 2. 국내 논의 배경과 경과 10
 3. 이해관계자 먹거리 정책 수요 분석 14

제3장 국내 논의 추진 개요와 주요 논의 내용

1. 국내 논의 개요 21
 2. 제1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23
 3. 제2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38
 4. 제3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50
 5. 제4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66
 6. 제5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79
 7. 논의 종합 94

제4장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 주요 결과

1. 개최 배경 97
 2. 사전 정상회의 및 정상회의 개요 98
 3. 사전 정상회의 주요 결과 100
 4. 정상회의 주요 결과 114

제5장 종합 시사점 125

부록

1. 사전 정상회의 개요 129

2. 정상회의 개요 142

참고문헌 147

제2장

〈표 2-1〉 조사대상 생산자 특성 15
 〈표 2-2〉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 15
 〈표 2-3〉 조사대상 전문가 특성 16
 〈표 2-4〉 식량안보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18
 〈표 2-5〉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19
 〈표 2-6〉 먹거리 보장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20

제3장

〈표 3-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제1~5차 국내 논의 참석자 요약 22

제4장

〈표 4-1〉 UN 사전정상회의 주요 일정과 논의 주제 99
 〈표 4-2〉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주요 일정 100

제2장

〈그림 2-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2021 홈페이지 8

〈그림 2-2〉 국내 논의 및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 12

〈그림 2-3〉 202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 논의 홈페이지 12

〈그림 2-4〉 국가식량계획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9월 발표) 13

〈그림 2-5〉 이해관계자 먹거리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17

〈그림 2-6〉 식량안보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17

〈그림 2-7〉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19

〈그림 2-8〉 먹거리 보장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20

1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015년에 세계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밀레니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 이에 따라 UN은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세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해 각국 정부와 논의하고, 2015년에 17개의 새로운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를 발표함.
- SDG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지구 환경 문제, 기술, 주거, 고용, 사회구조 등 경제사회 문제 등과 관련된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음.
- UN은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각국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해 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가 같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써 SDGs의 달성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UN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정상회의를 계기로,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17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새로운 실천에 착수하고자 함.

○ UN은 정상회의가 식량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식량과 관련된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정상회의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 즉 “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가 될 수 있도록, 과학, 산업, 정책, 의료, 학문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당사자들과 농민, 청년단체, 소비자그룹, 환경운동가,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러한 주체들과 전 세계 푸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함.

○ 이에 정상회의에 앞서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가 푸드시스템을 점검하고,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향후 취해야 할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글로벌 논의(Global Dialogue),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 및 기타 독립 논의(Independent Dialogue)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함. 이러한 논의를 통해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접근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모아서 2021년 9월에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함. 특히, 2021년에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를 촉구한 UN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내 논의를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 개최하고,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향후 취해야 할 조치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함.

- 기존에 UN SDGs를 바탕으로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를 수립·발표하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음.

-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시키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

- 이 보고서는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내 대응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됨.

2. 주요 연구 내용

■ 서론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주요 연구 내용

■ 국내외 푸드시스템 논의 배경과 이해관계자 정책 수요

- 국제 사회 논의 배경과 경과
- 국내 논의 배경과 경과
- 이해관계자 먹거리 정책 수요 분석

■ 국내 논의 추진 개요와 주요 논의 내용

- 국내 논의 개요
- 제1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 내용
- 제2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 내용
- 제3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 내용
- 제4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 내용

○ 제5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 내용

○ 논의 종합

■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 개요 및 주요 결과

○ 개최 배경

○ 사전 정상회의 및 정상회의 개요

○ 사전 정상회의 주요 결과

○ 정상회의 주요 결과

■ 종합 시사점

2

국내외 푸드시스템 논의 배경과 이해관계자 정책 수요

1. 국제 사회 논의 배경과 경과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세계 빈곤을 줄이기 위해 수립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년에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 이에 따라 UN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 UN은 각국 정부와의 논의 끝에 2015년에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함. 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상 회의에서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SDGs의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이행할 예정임.

-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우선시함.

〈글상자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빈곤퇴치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종식 -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과 웰빙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4. 양질의 교육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물과 위생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깨끗한 에너지 -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불평등 완화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해양 생태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 생태계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평화, 정의와 제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자료: 임팩트라이브러리 웹페이지(<https://impactlibrary.net>, 검색일: 2021. 10. 5.).

○ SDGs의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며, 코로나19,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으로 인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UN 사무총장은 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따라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가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 정상회의는 2021년 9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개최됨.

○ UN은 정상회의 준비 사무국을 구성하고 SDGs 달성을 위해 5대 실천경로(Action Track)를 제시하였으며, 정상회의 특임대사로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 AGRA) 위원장인 아그네스 칼리바타(Agnes Kalibata)를 임명하고, 실천경로별 팀을 구성하여, 자문 및 공개세미나를 진행함.

- 5대 실천경로는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② 지

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③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④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⑤ 취약계층·층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증진 등임.

- UN기구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팀과 과학그룹이 각 경로별 논의를 정리하고, 국제기구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함.

○ UN은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협력·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이에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모든 사람을 위한, 즉, “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가 될 것을 촉구하고, 정상회의에 앞서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을 제안함.

○ “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은 글로벌 논의(Global dialogue),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 독립 논의(Independent dialogue) 등을 통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 글로벌 논의는 UN 정상회의 사무국과 타 분야 국제기구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됨. 예컨대 2020년 12월에 푸드시스템, 2021년 1월에는 에너지에 관한 글로벌 논의가 이루어짐. 국내 논의는 사전 정상회의 이전에 각국 정부 주관하게 개최되었으며, 이밖에 민간분야, 농업인·생산자단체, 원주민(토착민) 등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별로 독립논의가 이루어짐.

〈글상자 2〉 ‘모두의 정상회의’를 위한 세 가지 논의 체계

글로벌·국내·독립 논의는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가 푸드시스템을 점검하고,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향후 취해야 할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정상회의에 앞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는 각 회원국 정부가 주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관하여 논의, 글로벌 논의(Global Dialogue)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무국(케냐 소재)이 타 국제기구와 공동 주관하고 회원국·국제기구·민간 등이 참여, 독립 논의(Independent Dialogue)는 UN이 제시하는 원칙과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개인·단체 누구나 주관하고 논의 결과를 사무국 홈페이지 게재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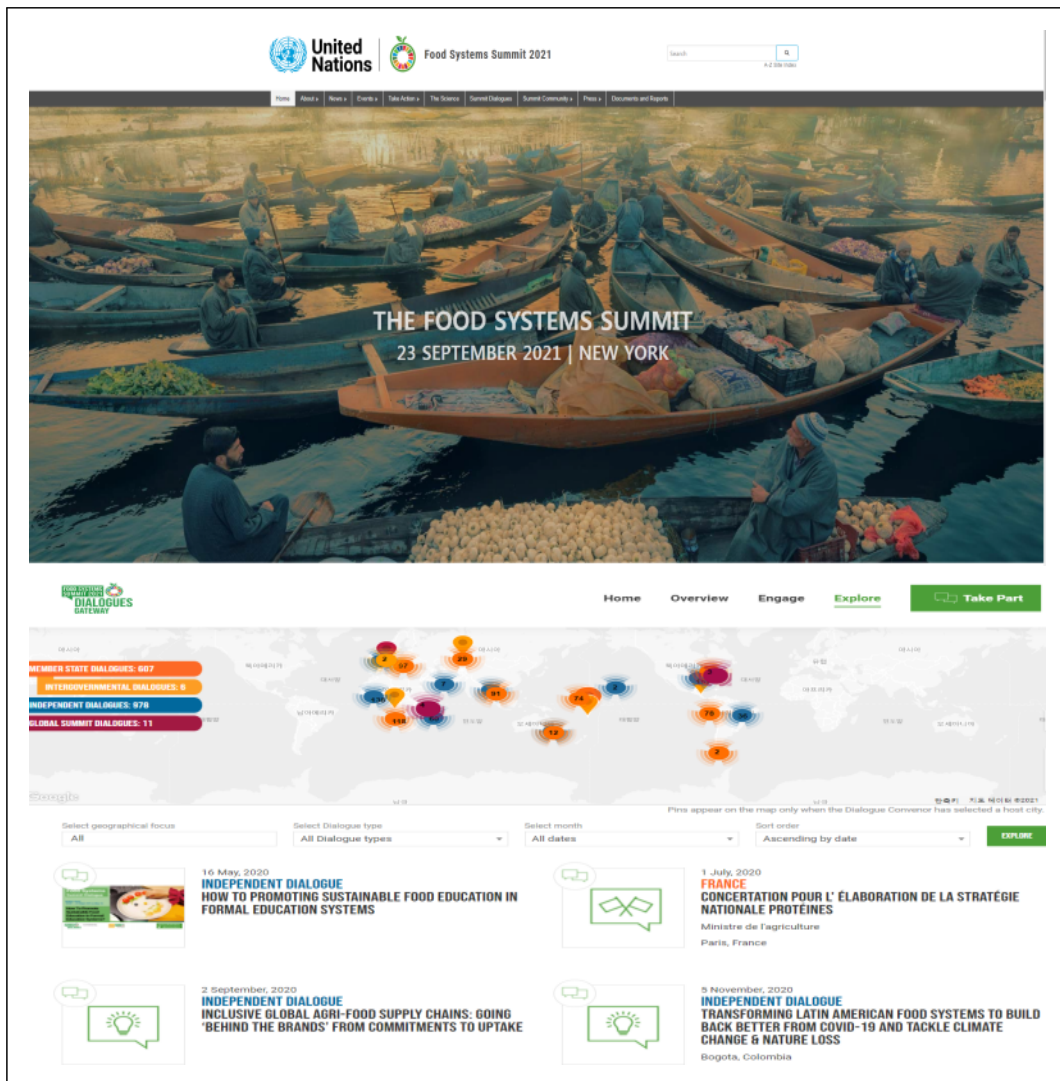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국제연합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https://food-systems-summit.krei.re.kr>, 검색일: 2021. 10. 5.).

○ UN은 국내 논의를 위해서 각국이 회원국별로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별 국내 논의 의장을

선정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UN이 초기에 제시한 5대 실천경로(Action Track)를 바탕으로 2021년 초부터 다양한 계층과 관련 단체·기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국내 논의를 국가별로 추진하여 왔음.

- UN은 “Food Systems Summit 2021”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각국이 국가별 국내 논의 결과를 게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2021 홈페이지



자료: United Nations Food System Summit 2021 웹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1. 10. 6.).

○ 국가별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립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로마에서 사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1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뉴욕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됨.

- 사전 정상회의는 회원국·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을 조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정상회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글상자 3〉 UN이 당초 제시한 5대 실천경로별 주요 내용

<p>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Ensure access to safe and nutritious food for all)</p> <p>○ (배경) 무역, 도시화, 빈곤 등으로 기아, 영양 불균형이 증가하는 반면, 글로벌 식량생산의 3분의 1은 식량손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물, 비료 등의 1/4가 낭비되고 농업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차지, 토지 황폐화, 물 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촉진 <p>○ (논의사항) △정책, 연구, 모니터링, 평가의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 △토양탄소격리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 적용, △식품손실·음식물 쓰레기 감축, △영양과다·결핍을 조절하는 식생활 변화 주도 등 기아종식, 영양가 있는 식단에 대한 일반인 접근보장 등 논의</p> <p>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Shift to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p> <p>○ (배경) 식품은 환경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자, 가뭄-홍수 증가 등 주요 기상이변의 가장 큰 희생양이며, 환경복원에 활용 가능한 최선의 도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현재 식품 소비 패턴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변해야함 <p>○ (논의사항) △공공조달, 물류·유통 등 식품공급망, △식품성분 조정, 1인분 용량 변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디자인 포장용기 전환, △도시-농촌의 연계 강화 등 논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p> <p>③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Boost nature-positive production)</p> <p>○ (친환경적 식품생산 토대) △식품생산을 위한 과도한 토지전용으로부터 자연생태계 보호, △기존 식품생산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훼손된 환경을 복원, 회복, △토지 일부를 보존을 위해 남김</p> <p>○ (논의사항) △지역단위 생산, 도시농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농가, 농업전문가, 학계 등 지식개발 참여·강화, △천연비료, 식물보호제, 질소고정생물 등 친환경 식품생산에 대한 지식·혁신 활성화, △참여자 인증시스템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참여 보증제도(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 등 농촌지역의 권한 부여와 농가간 협력 도모, △사회적 기업·공정무역·협동조합 등에 대한 순환/연대경제 등과의 시너지 효과 확대 △친환경 식품생산의 마케팅, 가공시설 개선 등 논의</p>
--

④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 (배경) 가정,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에 만연한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이 푸드시스템의 빈곤 경감, 평등한 생계를 달성하는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음
- (논의사항) 평등한 고용기회, 농촌 여성 농업인·소수민족 등 푸드시스템 상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방안 등 논의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

- (배경) 푸드시스템 내 모두가 불안정에 대비·참여하고 재난·위기 시 모두에게 식량안보, 영양, 평등한 생계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경지, 관개, 비료 등 투입요소 확대하면서 지속가능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산업들과의 토지, 물, 노동력 등 천연자원 사용에 있어 경쟁관계를 조정할 필요 있음
- (논의사항) △지역차원에서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코로나19, 가뭄 등 재해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위험 평가, 준비 등 리스크 공유 메커니즘 개발, △공공, 민간, 생산자 파트너십(4P, public-private-producers-partnership)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 평등 증진,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푸드뱅크, 긴급식량창고, 영양공급을 위한 현금지원) 등 논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국내 논의 배경과 경과

-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UN의 SDGs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서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K-SDGs는 17개 분야,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먹거리 관련한 주요 목표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 먹거리 관련한 세부목표는 취약계층 식량접근성 보장,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 유지 등이며, 주요 정책은 공공급식 활성화,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친환경 농업 확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쌀 수급 안정 등임.

- K-SDGs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함. 이에 따라 2010년대 후반부터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지역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국가 단위에서는 그간 ‘국가 푸드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와 대통령 직속 농업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확산되면서 식량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식량안보 확보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짐. 이에 따라 그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코로나19 이후의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을 반영하여 2021년 3월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함.
- 이후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에 앞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국가식량계획’과 UN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제시한 5대 실천경로를 바탕으로 국내 논의가 추진됨. 국내 논의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UN의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이와 관련된 국내 논의 추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UN의 요청에 따라 국내 의장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선정하여 국내 논의를 추진하였음.
- 제1차 국내 논의는 향후 개최될 국내 논의의 방향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2021년 3월 30일(서울 LW컨벤션 센터)에 개최됨. 이후 제2차 국내 논의가 4월 21일(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 ‘식량안보’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3차 국내 논의는 4월 28일에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됨. 제4차 국내 논의는 5월 7일(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일(여의도 전경련회관)에 그간의 국내 논의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음.

○ 국내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국내에 서는 기존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국가식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 여, 2021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함.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내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21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뉴욕에서 개최된 정상회 의에 참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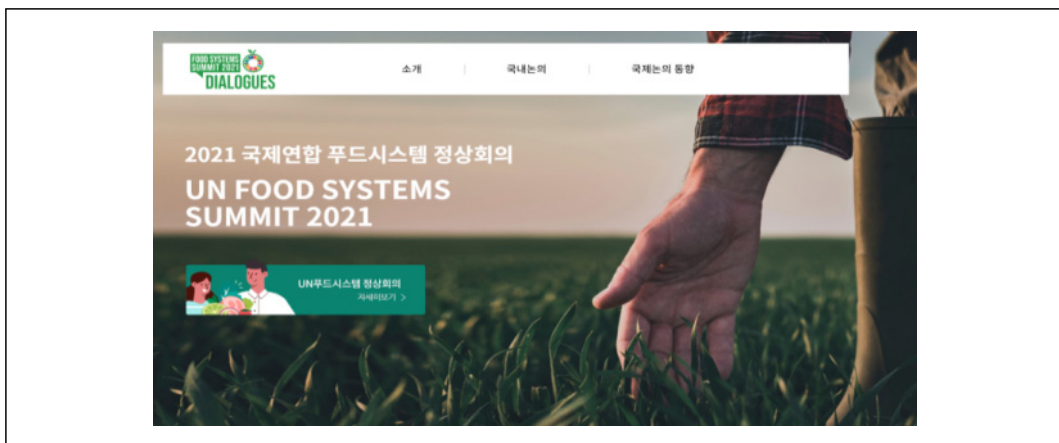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국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먹거리 문제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 령하기 위해 ‘202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 논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함.

〈그림 2-2〉 국내 논의 및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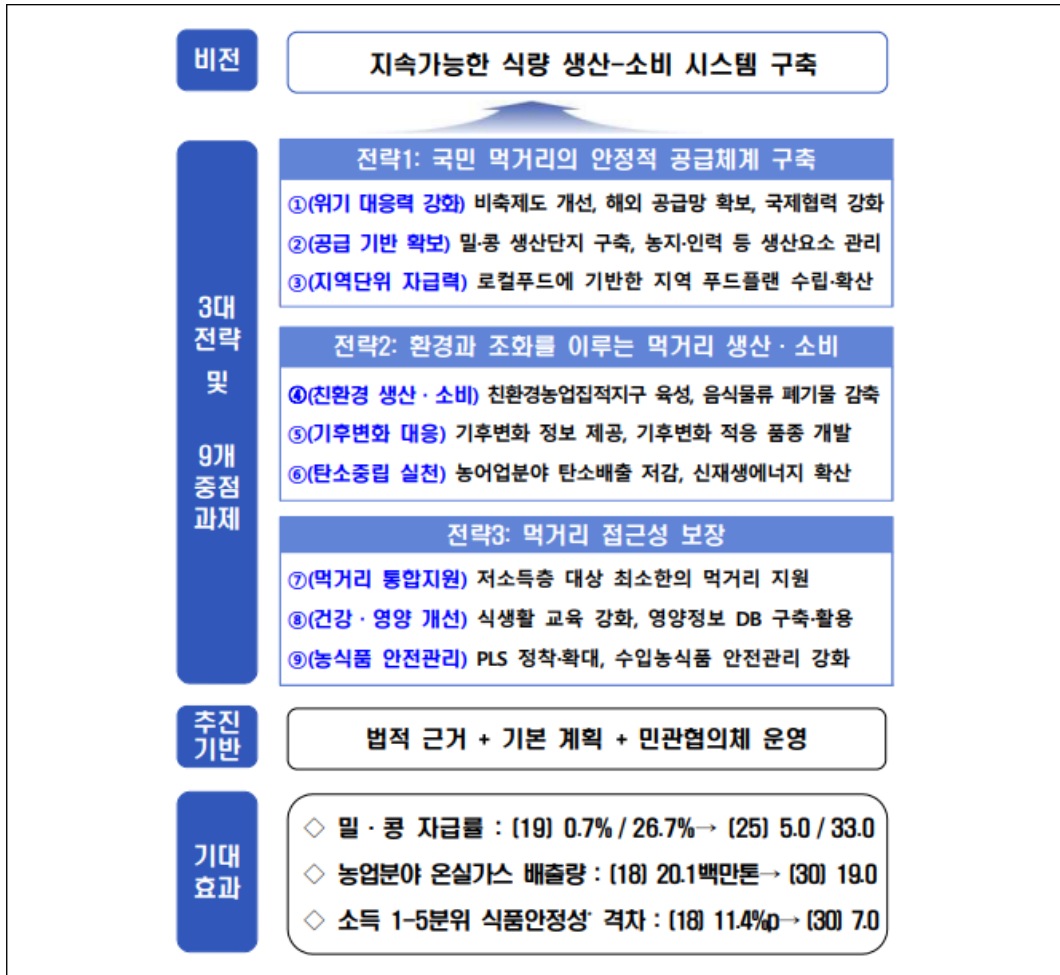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202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 논의 홈페이지



자료: 202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 논의 홈페이지(<https://food-systems-summit.krei.re.kr>, 검색일: 2021. 10. 6.).

〈그림 2-4〉 국가식량계획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9월 발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자료 참조(<https://www.korea.kr>, 검색일: 2021. 9. 30.).

3. 이해관계자 먹거리 정책 수요 분석

3.1. 조사 개요

-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정책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중 생산자 조사는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자 조사 풀(pool)을 활용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함.
 - 설문조사 대상인 생산자는 영농경력이 5~10년 미만인 생산자가 36.3%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다음으로 10~20년 미만(31.7%), 20년 이상(27.1%), 5년 이하(5.0%) 순이었음. 또한 주 취급 작목은 채소가 27.5%로 가장 많았고, 과수 25.8%, 쌀 17.5%, 축산 17.1%, 곡물 12.1% 순이었음. 영농규모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27.5%, 1천~3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23.3%로 가장 많았음. 이밖에 3천~5천만 원 미만(15.4%), 5천~8천만 원 미만(12.5%), 1억 원 이상(14.6%), 8천만~1억 원 미만(6.7%)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소비자 조사는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일반국민 1,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는 농업, 식품, 영양 등 농업 및 식품 관련한 정책담당자, 학계·연구계, 관련 기관·단체 등 전문가 148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메일 조사를 실시함.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는 조사 전문업체인 (주)리서치 앤 리서치(R&R)가 대행함.
 -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는 남자가 50.7%, 여자가 49.3%였으며,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2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19.2%), 40대(18.8%), 30대(16.6%), 20대(16.4%), 10대(6.0%) 순임. 거주지역은 권역별로 수도권 30.7%, 경상권 30.1%, 전라권 18.3%, 충청권 15.9%, 강원권 5.0% 등이었음.
 - 전문가 조사 응답자는 분야별로 정책담당자 42.1%, 식품·영양 29.6%, 농업·농촌 28.3% 등이었음.

〈표 2-1〉 조사대상 생산자 특성

구분	항목	사례수	비중
영농경력	합계	240	100.0
	5년 이내	12	5.0
	5년~10년 미만	87	36.3
	10년~20년 미만	76	31.7
	20년 이상	65	27.1
주취급작목	합계	240	100.0
	쌀	42	17.5
	곡물	29	12.1
	과수	62	25.8
	채소	66	27.5
	축산	41	17.1
영농규모	합계	240	100.0
	1천만 원 미만	66	27.5
	1천만 원~3천만 원 미만	56	23.3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	37	15.4
	5천만 원~8천만 원 미만	30	12.5
	8천만 원~1억 원 미만	16	6.7
	1억 원 이상	35	14.6

자료: 저자 작성.

〈표 2-2〉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체	1,109	100.0	
성별	남자	562	50.7
	여자	547	49.3
연령	10대	66	6.0
	20대	182	16.4
	30대	184	16.6
	40대	209	18.8
	50대	213	19.2
	60대	255	23.0
거주지역 (권역별)	수도권	340	30.7
	충청권	176	15.9
	전라권(제주포함)	203	18.3
	경상권	334	30.1
	강원권	56	5.0

자료: 저자 작성.

〈표 2-3〉 조사대상 전문가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체		152	100.0
분야	정책담당자	64	42.1
	농업·농촌	43	28.3
	식품·영양	45	29.6

자료: 저자 작성.

3.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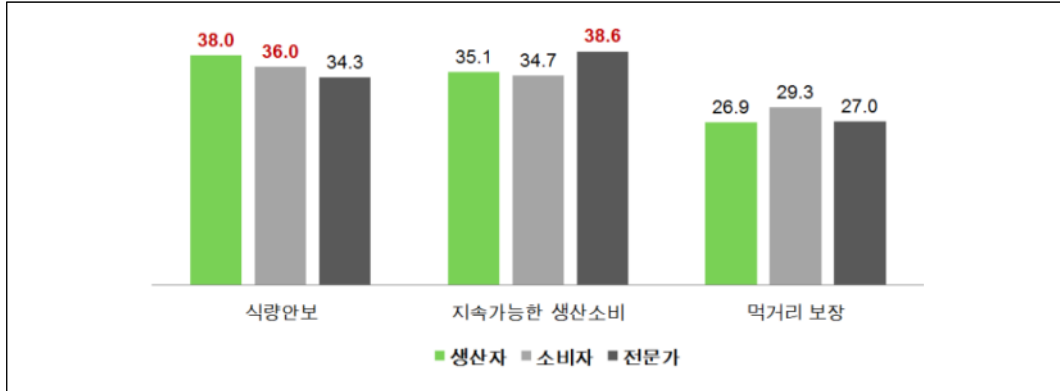
■ 먹거리 정책 우선순위 인식

○ 생산자와 소비자는 식량안보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가장 중시함. 생산자는 식량안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38.0%였으며,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5.1%, 먹거리 보장 26.9% 순이었음. 소비자의 경우 생산자와 같이 식량안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3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4.7%, 먹거리 보장 29.3%였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가 38.6%였으며, 다음으로 식량안보 34.3%, 먹거리 보장 27.0%였음.

- 먹거리 보장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 모두 낮았음. 그러나 소비자가 생산자와 전문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먹거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었음.

〈그림 2-5〉 이해관계자 먹거리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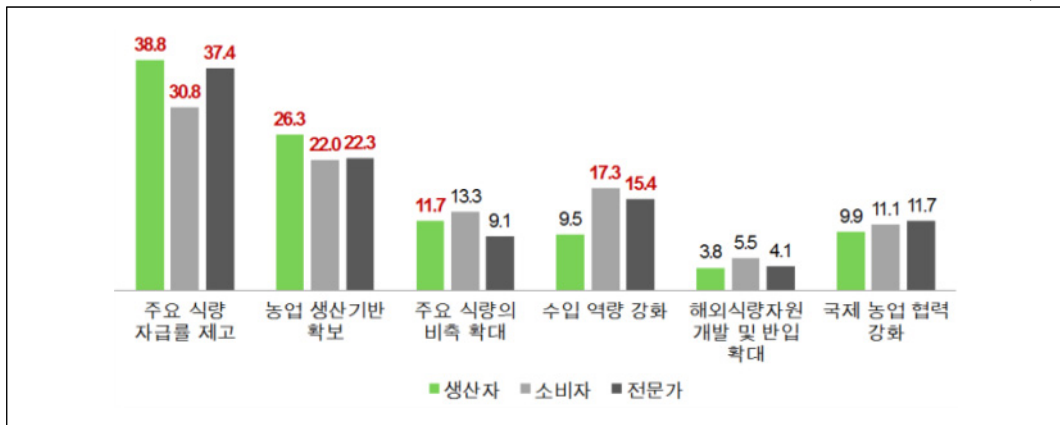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식량안보 세부 정책 중요도 평가

○ 식량안보에 관한 세부 정책 중에서 생산자(38.8%), 소비자(30.8%), 전문가(37.4%) 모두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함. 다음으로 농업 생산 기반 확보에 대해서 생산자 26.3%, 소비자 22.0%, 전문가 22.3%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해외식량자원 개발·반입에 대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모두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함.

〈그림 2-6〉 식량안보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2-4〉 식량안보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단위: 명, %

순위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1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
2	농업 생산기반 확보	농업 생산기반 확보	농업 생산기반 확보
3	주요 식량 비축 확대	수입 역량 강화	수입 역량 강화
4	국제 농업 협력 강화	주요 식량 비축 확대	국제 농업 협력 강화
5	수입 역량 강화	국제 농업 협력 강화	주요 식량 비축 확대
6	해외식량자원 개발·반입	해외식량자원 개발·반입	해외식량자원 개발·반입

자료: 저자 작성.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 정책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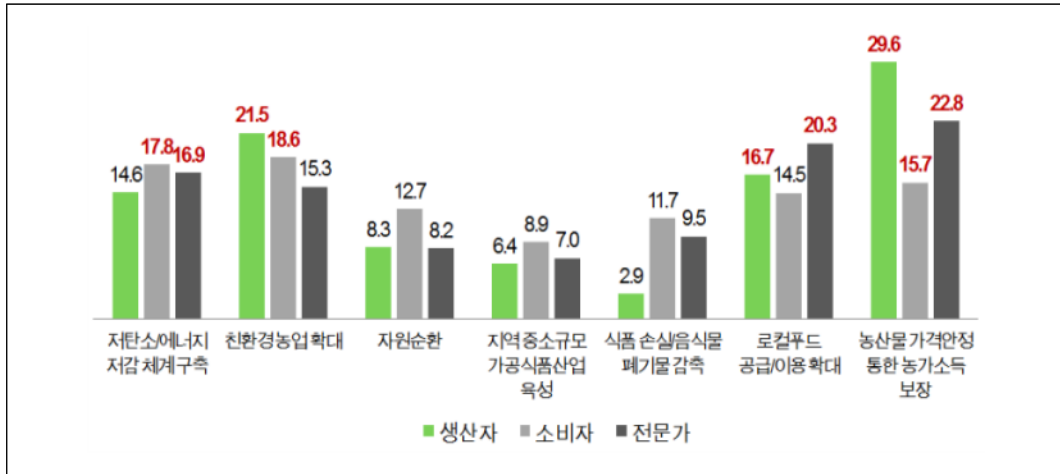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에 관한 세부 정책 중에서 생산자와 전문가는 각각 29.6%, 22.8%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함. 반면 소비자는 친환경 농업 확대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중이 18.6%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생산자는 친환경농업 확대(18.6%),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16.7%)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소비자는 저탄소·에너지 저감 체계 구축(17.8%), 농산물 가격안정 통한 농가소득 보장(15.7%)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전문가는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20.3%), 저탄소·에너지 저감 체계 구축(16.9%)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 생산자가 가장 낮게 평가한 세부 정책은 식품 손실·폐기 감축이었으며(2.9%), 소비자와 전문가는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 산업육성을 각각 8.9%, 7.0%로 가장 낮게 평가함.

〈그림 2-7〉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2-5〉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단위: 명, %

순위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1	농산물 가격안정 통한 농가소득 보장	친환경 농업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통한 농가소득 보장
2	친환경농업 확대	저탄소·에너지 저감 체계 구축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
3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통한 농가소득 보장	저탄소·에너지 저감 체계 구축
4	저탄소·에너지 저감 체계 구축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	친환경농업 확대
5	자원 순환	자원 순환	식품 손실·폐기 감축
6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	식품 손실·폐기 감축	자원 순환
7	식품 손실·폐기 감축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

자료: 저자 작성.

■ 먹거리 보장 세부 정책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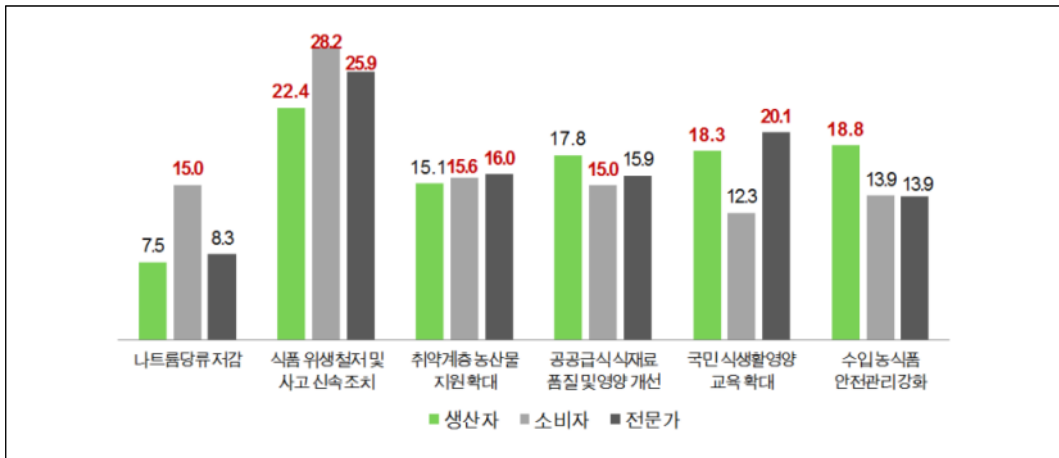
○ 먹거리 보장에 관한 세부 정책 중에서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모두 식품 위생 철저 및 사고 신속 조치를 각각 22.4%, 28.2%, 25.9%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함. 생산자는 다음으로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18.8%), 국민 식생활·영양 교육 확대(18.3%)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소비자는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확대(15.6%),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및 영양 개선(15.0%), 나트륨·당류 저감(15.0%)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함. 전문가는 국민 식생활·영양 교육 확대(20.1%),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확대(16.0%)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가장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먹거리 보장 세부 정책은 생산자(7.5%)와 전문가(8.3%)는 나트륨·당류 저감이었으며, 소비자는 국민 식생활·영양 교육 확대(12.3%)였음.

〈그림 2-8〉 먹거리 보장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2-6〉 먹거리 보장 세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

단위: 명, %

순위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1	식품 위생 철저 및 사고 신속 조치	식품 위생 철저 및 사고 신속 조치	식품 위생 철저 및 사고 신속 조치
2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확대	국민 식생활·영양 교육 확대
3	국민 식생활·영양 교육 확대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및 영양 개선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4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및 영양 개선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및 영양 개선
5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확대	국민 식생활·영양교육 확대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6	나트륨·당류 저감		나트륨·당류 저감

자료: 저자 작성.

3

국내 논의 추진 개요와 주요 논의 내용

1. 국내 논의 개요¹⁾

-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30일에 1차 논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에 개최한 5차 논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총 5차례의 국내 논의를 개최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한 UN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 5차례의 국내 논의 과정에서 연령, 성별, 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총 5차례의 국내 논의에 108명이 참석하였으며, 연령대별로 31-50세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세 이상 34명, 30세 이하가 9명이 참여함.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가 69명이었으며, 여성 참여자가 39명이었음. 또한 분야별로 교육·연구 분야 전문가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31명, 무역 및 통상 14명, 농업생산 13명, 식품산업 10명, 환경 및 생태 8명 등이 참여함.

¹⁾ 이 장은 5차례 걸쳐서 개최한 국내 논의 결과로서 토론자 개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며, 국내 논의의 주최 및 주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

〈표 3-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제1~5차 국내 논의 참석자 요약

국내 논의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총 참석 인원	19	19	27	21	22	108
연령대						
30세 이하	2	2	1	2	2	9
31~50세	10	13	18	12	12	65
51세 이상	7	4	8	7	8	34
성별						
남성	9	13	19	13	15	69
여성	10	6	8	8	7	39
분야						
농업생산	3	2	2	2	4	13
환경 및 생태	1	1	3	0	3	8
무역 및 통상	2	5	3	2	2	14
교육·연구	6	4	7	10	5	32
식품산업	3	1	3	1	2	10
중앙 및 지방 정부	4	6	9	6	6	31

자료: 저자 작성.

- 제1차 국내 논의(2021. 3. 30)에서는 추후에 이어지는 국내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제2차 국내 논의(2021. 4. 21)는 ‘식량안보’, 제3차 국내 논의(2021. 4. 28)는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제4차 국내 논의(2021. 5. 7.)는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세부 주제로 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마지막으로 제5차 국내 논의(2021. 6. 1)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이 이루어짐.
- 5차례의 국내 논의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로마에서 개최된 사전 정상회의와 9월 23일과 24일의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참여함.

2. 제1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2.1. 회의 개요 및 진행

2.1.1. 회의 개요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개최 목적: 올해 9월 예정된 UN 정상회의에 앞서, 중장기 먹거리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일시: 2021. 3. 30.(화), 14:00~16:00
- 장소: LW컨벤션 크리스탈홀
- 온라인 생중계 주소: youtube.com/mafrakorea(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

2.1.2. 회의 진행 순서

구성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발제 사회자 KREI 박성진 박사	14:00~14:05	5'	• 인사 말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4:05~14:15	10'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배경 설명(영상)	UN 사무국 David Nabarro
	14:15~14:20	5'	• 정상회의 개요 설명	국제협력총괄과 김경은 서기관
	14:20~14:25	5'	• 국내 논의 현황 및 향후 계획	식량정책과장
	14:25~14:35	10'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소개	농특위 홍근형 팀장
	14:35~14:45	10'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KREI 황윤재 박사
2부 토론 좌장 김홍상 원장	14:45~15:55	70'	• 토론 ① 푸드시스템 정의·목적 등 ② 국내 논의 주제(안) 검토 ③ 향후 2~4차 회의 관련 의견 수렴(참석자, 논의범위 등)	토론자
	15:55~16:00	5'	• 폐회 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1.3. 주요 사진(제1차 국내 논의)



2.2. 제1차 국내 논의 주요 토론내용

- 1부에서는 국내 논의 의장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UN 사무국 David Nabarro의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배경 설명 영상” 시청, 농림축산식품부 김경은 서기관의 “정상회의 개요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과장의 “국내 논의 진행 현황 및 계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홍근형 팀장의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소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연구위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함.
- 2부에서는 의장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1부에서 발제한 발표 내용에 관한 토론과 함께 ① 푸드시스템 정의·목적, ② 국내 논의 주제(안), ③ 향후 2~4차 회의 관련 의견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함.
- 좌장, 토론자,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등 다양한 참여자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국내 논의의 의의 및 결과’, ‘국내 푸드시스템 진단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한 의견’, ‘푸드시스템의 정의·목적 등에 대한 의견’, ‘향후 국내 논의 주제(안) 논의’, ‘향후 논의 및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제별 토론내용을 요약함.

[정부 기관 전문가 의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물분과위원장)

- 국가식량 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생산 중심의 논의가 있었지만 ‘소비를 통한 생산의 견인’으로의 관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와는 다름.
- 농과 식이 함께 붙어서 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음.
- 공공성에 기반을 둔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 판단하여 시작하게 됨.
- 지역 푸드플랜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 그 사이에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이 나타나면서 농특위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식량계획(안)을 발표하게 됨.
-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 최근에 국가먹거리종합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먹거리 관련 운동가 400여 명과 원탁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올 한해 의제로 ‘국가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스템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음.
- 생애주기별 먹거리 보장이 그동안에는 취약계층 등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 이제까지는 생산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된 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는데, 소비 확대를 통해 생산을 끌어 올 방법을 고민하게 됨.
-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먹거리 전략에 기반하여 농업도 현실적인 방향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고민함.

[학계 및 연구계 의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2016-30년까지의 SDGs의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었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크게 주목받은 것으로 판단됨.
- 단지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대부분 이러한 내용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투자·계획적인 분야별 실행계획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푸드시스템이라 함은 비료, 농약 등 투입 요소, 공급자, 농업생산자, 식품 및 외식업체, 유통 및 최종 소비자까지 실천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임.
- 국가적 식량안보에 대한 의식은 높지만, 가구 단위, 계층별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작년 5월에 유럽에서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을 참고하였으면 함. 유럽연합은 공동 정책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한 것임.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으로, 취약계층이나 가구 단위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생산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저탄소 인증제'라는 것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전 단계 푸드시스템 발전이 필요한 것임. 푸드마일리지, 탄소, 물, 생태발자국 등에 대해 농식품 분야에서 실제 정책과 국민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있을 것임.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식생활교육'임.
- 우선 식생활 교육 지원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여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ESG 경영²⁾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힘든 상황인데, 농협, 하림, CJ 등 기업이 ESG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임. 즉, 핵심 기업이나 단체가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함께 참여하였으면 함.
- 이와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 현 수준과 목표를 설정해야만 객관적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임.
- 실천경로(Action Track)를 번역 수준이 아닌 국내에 맞도록 분야별로 실천계획과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함.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

- UN 회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먹거리 정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큰 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함.
- 현재 통계로 농가인구가 5%이며 소비자가 95%가 있는데, 5%의 농가인구에 대해서는 미래가치 측면에서 정책을 맞춰야 하고, 95%에 대해서는 현재가치에 대해 시급한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임.
- 먹거리 보장이라는 개념을 국제적으로 맞춘 것이 서울시가 가장 처음이었음.
- 이제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발휘 등, 그동안 먹거리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음. 우선 95%에 대한 먹거리 정책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현재 먹거리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95%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인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 먹거리 정책의 목표는 '이상적인 먹거리 보장 상태의 달성'에 있다고 생각함.

²⁾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함.

- 먹거리 보장에 대한 개념에는 안전, 영양, 양적으로 충분한 먹거리를 언제나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 기후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에 있음.
- 국가정책의 목표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것 같음.
-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설정된 3가지 큰 논의 주제의 포함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 푸드시스템 전체의 관계와 그것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밀라노 협약의 6가지 틀에 이미 있음.
- 현재 ESG를 정치, 문화 영역에 확대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밀라노 협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거버넌스, 생산, 공급, 유통, 지속가능한 식생활, 먹거리 자원 총 6가지 틀이 있으며, ESG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시스템 복원을 위한 E와, 먹거리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 S 쪽에 있는데, 밀라노 협약에서는 ‘사회형평성’에 있으며, G는 누가 참여할 것이냐를 의미하는데, UN에서는 위기대응, 시스템 복원 등을 공동체가 같이 해야 하는 내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음.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먹거리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잘 못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적용해보면 약 500만 명이 먹거리 미보장 상태임.
- 이러한 내용은 건강 격차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먹거리 빈곤층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food secure를 100%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이 중요도와 시급도를 바탕으로 우선 과제로 포함되었으면 함.
- 식생활은 여기저기 나오는데,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교육하는지가 중요함.
- 영양 상태를 분석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기본 영양소가 결핍인 상태임.

- 영양 정책의 목표, 식생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 섭취가 과다해서 질병이 오거나, 많이 먹지만 특정 영양이 부족해서 질병이 오는 등 악순환인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나트륨 등 단순한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됨.
- 먹거리 정책은 전환된 접근을 위한 통합적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임. 다만, 자칫하면 큰 범위, 큰 목표를 잃을 수도 있을 것임.
- 향후 최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양과 건강의 상관관계, 선순환 구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생산자 단체 의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 첫 번째로 중장기적 먹거리 전략은 먹거리 공급뿐만이 아닌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가 담겨야 할 것임.
- 즉, 먹거리를 핵심 축으로 두고, 농업·농촌과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 먹거리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임.
- 중장기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푸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먹거리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과 관련 내수 산업 및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간의 연계성도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대폭 마련되어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임.
- 두 번째로,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관한 논의는 농업·농촌·농민 문제와 함께 정책에 대한 논의를 국가경영 철학과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즉 5천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국민 농업, 협치 농정의 길을 여는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이론적인 성급한 논의와 전망은 지양하고 이 자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함.
- 이번 논의의 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내실 있게 잘 조율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특별히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분야의 관계자들이 각자의 영역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먹거리 전략 수립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홍보 등이 함께 병행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임.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 LH 사건으로 촉발된 여러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의 먹거리 대책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임.
- 설문조사 결과가 정치권에서 활용되었으면 함.
- 푸드플랜에 대한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이후 나왔고, 농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함.
- 다만, 아직은 농업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는 것으로 생각함.
- 국회 차원에서도 현안에 치이다 보니, 중장기 개발을 위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할 것임.
- UN 보고서 요약을 보면 내용은 좋지만 와 닿지 않음.
-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정책도 각국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에 맞는 식품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 정도가 전 세계의 평균 이상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식생활 교육 확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에서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보이지 않음.
- 유아시기부터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공익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 생각함.
-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함.
- 먹거리 종합 전략안에는 2050년까지 가져가야 할 탄소중립이 들어가 있을 텐데, 긍정적인 요소 외에 탈 탄소를 위한 연착륙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관행농업에 익숙해져 있는 농가에는 어려운 상황임.
- 면세유, 전기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
- 통합 먹거리 등을 점검받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여기에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토론의 장이 필요함.
- 이를 통해서 실태조사, 주기적 성과평가, 대국민 동참, 범부처 차원의 논의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임.
- 공공급식, 국내 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전환에 대해 상생 기금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함.
- 식생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지방분권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며,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신을 녹여내는 것이 좋을 듯함.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산인력 확보이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자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함.
- 농업 인력의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청년 농업인이 농업정책의 변화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육성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지금의 정책들은 질보다는 양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 생각함.
- 신규 창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에 진입한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이렇게 급하게 유입된 청년농으로 인해 농촌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 이후 유실되는 사례도 많음.
- 청년 농업인들의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더 전문적인 청년 농업인이 인재로서 농업과 농촌에 유입되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람.
- 실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의도 만 30세, 만 35세 40세, 49세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임. 즉, 이를 위해 중장기 육성 제도 및 민간 협조 전담 기구 신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함.
- 친환경 농업이 최근 들어 기후변화나 대내외 환경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음.
- 친환경 농가는 현재 선택에 따른 위기, 위험 등을 모두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적인 육성 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실제로 청년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시기가 너무 길고 전환 과정에서 관행농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코로나 이후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어려운 상황임.
-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판로 및 생활 여건 개선에 어떤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신규 유입 농업인들이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방향성들을 선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 UN 농민 권리선언의 일맥 속에서 이제는 먹거리, 농지 문제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 UN 푸드시스템 회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1)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2) 식량 주권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축약해 보았음.
- 이때까지의 다국적 기업 주도 하의 식량 체계 아래서는 오히려 기아 문제가 더 심각해졌음.
- 네덜란드 플로우 교수가 농민 농업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음.
- 고투입 방식, 규모화 방식 농정에서 농민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농정 틀 전환이 필요함.
- 국가 식량계획 주요 과제들 속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 해외 조달 관련하여 실망스러움.
- 코로나 시대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함.
-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식량 자급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임.
- 식량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농지, 농업 예산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데, 타 작물 지원사업이 작년에 없어졌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경관 보조 사업 등도 줄어드는 등 현장에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음.
- 식량안보를 식량 자급력 측면에서 바라보고, 먹거리 보장에서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공공급식의 영역을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국가가 공공비축을 통해 적극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농업예산의 확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히 농식품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함.
- 전여농에서는 생물다양성, 종 다양성을 위해서 토종종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크푸드, 배달음식 등으로 인해 식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함.

- 농가 생산 전통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특례조항들을 적용하여 해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함.

[소비자 단체 의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국내 논의의 세부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며, 세부 주제도 동의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먹거리보장 관련 사항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노 플라스틱, 탄소제로 등에 앞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민이 필요함.
- 지역단위 선순환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홍보, 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소비자에게의 이익과 혜택을 홍보하고 관리, 모니터링하고 있음.
- 다양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식량 자급,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가까이 있는 먹거리 소비에 대하여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혜택 또한 중요함.
- 가격과 품질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사회적 가치만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 주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한 상황임. 먹거리와 관련해서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각 주체가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해야 함.

- 물론 식생활 소비 교육도 필요함.
- 세 번째 주제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이야기하였는데,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적 추구뿐만 아니라 질적 추구도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식품 안전관리 제도가 필요함.
- 안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강제성 있는 관리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먹거리 제도의 효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며, 영양과 균형을 위한 소비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모니터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음.
- 최근 GMO 농작물 등에 대해 표시,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등에 대해서도 표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논의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상회의가 기대됨.

[의장 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그동안 생산자 입장에서의 농민의 부가가치나 이익 등이 강조됐는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산의 영역을 바라보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큰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
-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먹거리 보장’ 영역에 큰 강조를 두게 되는데, 안전, 영양, 양과 질, 문화, 거버넌스, 선순환, 탈 탄소, 푸드마일리지 등 다양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인식 변화가 푸드서밋 국내 논의에서의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정책의 영역이 크게 강조가 되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통합적 체계의 틀, 사회적 이슈가 강조될 수 있음.

-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5% 농업인의 기본적 생산 가능한 조건과 관련하여 청년 인력,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소득 보장, 안전한 토양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95%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보장’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
- 제1차 국내 논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을 합의해 내자는 의견이 모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식량안보라는 국가 단위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의 가구별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생산자 영역에서도 국가 단위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며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가 다양한 계층과 가구 모두를 책임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람.
- 공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노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으로 ESG가 논의된 것으로 생각함.
-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은 생산 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안전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천해 내는 과정이 결국 ESG이고, 생산 영역과 소비 영역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때 ESG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임.
- 현재는 농특위 식량 계획이 1) 식량안보, 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 먹거리 보장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 ESG 문제, 실천을 위한 핵심적 과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임.
-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국내 논의를 통해 국제 논의를 진행하고 국내 문제도 풀어나가는 전략 설정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국내 산업구조 재편과 연관성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선택형 직불제의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프로그램에 선택형 직불제가 얹혀야 할 것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임.
- 현재 한국 사회가 국내 시장 자급률의 취약성과 먹거리 미보장 계층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로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과 기아 극복에 대한 지도력 발휘와 파트너십을 요구받고 있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과 연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내 논의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과정과 책임감 속에서 내부 문제를 어떻게 실천력 있게 풀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2.3. 제1차 국내 논의 종합

개최 방식

- 제1차 국내 논의는 2021년 3월 30일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음. 제1차 국내 논의는 9월 예정된 UN 정상회의에 앞서, 중장기 먹거리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19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음. 또한 농업인, 농식품 관계자 등 관심 있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음.

주요 안건

- 제1차 논의는 국제사회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첫 회의로서, 향후 진행될 국내 논의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논의 과정에서 ‘향후 국내 논의 주제’ 뿐만 아니라 ‘국내 논의의 의의’, ‘국내 푸드시스템 진단 및 문제점’, ‘푸드시스템의 정의·목적’, ‘향후 논의 및 진행과 관련된 의견’ 등이 논의되었음. 특히,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향후 국내 논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① 식량안보, 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③ 먹거리 보장의 3가지 이슈를 주요 논의 주제로 선정하는 것에 참석자의 대부분이 공감하였음.

논의 결과 요약

- 세부 논의 주제 중 ‘식량안보’ 주제에 관해서 공공급식 분야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 생산인력 및 농지면적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정책과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음.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주제와 관련하여 농축산물 저탄소 인증제의 내실화 및 확대,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농업인 지원을 통한 탈 탄소 추진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음. ‘먹거리 보장’ 주제에서는 취약계층 및 가구 단위 등 개인 맞춤형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빈곤층 해소, 영양 등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 등이 언급되었음.

3. 제2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3.1. 회의 개요 및 진행

3.1.1. 회의 개요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개최 목적: 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식량안보’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 일시: 2021. 3. 21.(수), 14:00~16:00
- 장소: H호텔 세종시티 4층 대연회장
- 참석 대상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산업계 및 관련 협회,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명 내외

3.1.2. 회의 진행 순서

구성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발제	14:00-14:05	5'	• 인사 말씀	KREI 우병준 박사
	14:05-14:20	15'	•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 국제 논의 및 국내 논의 추진 상황	농식품부 김경은 서기관
	14:20-14:30	10'	• '식량 안보' 관련 내용 소개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중심으로	농식품부 김정락 서기관
2부 토론 좌장 우병준 박사	14:30-15:55	85'	• 토론 : '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① 안정적 식량 공급 ② 자급기반 유지 ③ 위기대응력 강화	토론자
	15:55-16:00	5'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KREI 우병준 박사

3.1.3. 주요 사진(제2차 국내 논의)



3.2. 제2차 국내 논의 주요 토론내용

○ 제2차 국내 논의는 “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식량안보’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됨.

- 1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박사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경은 서기관과 김정락 서기관의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및 “‘식량안보’ 관련 내용 소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됨.
- 2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박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1부에서 발제한 발표 내용 및 국가식량계획과 함께 ① 국내 자급기반 확대, ② 위기 대응력 강화, ③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및 요구사항, ④ 국내·국제 논의 전반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함.

[학계 및 연구계 의견]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농업인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생각함. 한국이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국제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버전에서는 너무 국가 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닌지 염려됨.
- 자급 등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과연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 Bio diversity에 관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농지가 160만 헥타르 정도 있는데, 밀, 콩 자급률을 높이려면 밭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인, 학계 등이 모였으면 함.
- 제안할 것은, 식량안보와 관련한 연구를 전부 취합해서 문제들을 모두 모은 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잡았으면 함.
-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이번 UN Food Summit과 관련하여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서 세계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에 대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을 했으면 함.
- 소농과 관련하여 영양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특히 농업인들의 경우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반영 될 수 있어야 함. 소농의 안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식량계획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함.
- 시장과 정치권의 충돌, 환경과 자급률의 충돌 등과 관련하여 식량자급률 확보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적정 수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또한 인력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개발국의 일꾼을 한국으로 보내 활용하고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함.
-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수입을 한다면 많은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조사료의 품질이 떨어져서 쓰지 않는 등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유럽에서는 식량계획에 환경을 목적으로 자급률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음.
- 이탈리아 사례처럼, 소비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서 생태계와 농민을 보전할 방법을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우리도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임.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실무자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보는 식량안보와 국제에서 보는 식량안보의 개념이 차이가 있음.
- 해외에서는 식량안보지수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식량안보 지수 측정에 활용되는 각 평가 항목 등에 대해 점검을 했으면 함.

- 5가지 실천경로(Action Track)에 맞게 논의해야 하는데, 국가식량계획과 Action Track을 비교해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일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즉, 논의 사항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카테고리에 맞게 논의했으면 함.
- 앞으로는 FAO에서도 논의에 참여하여 방향을 잡았으면 함.

[기업 관계자 의견]

(농협경제연구소 팀장)

- 농협중앙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food summit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농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농협 논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ame changing solution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임.
- 이 논의의 주제를 보면 개도국을 위한 summit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food syste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음.
- 해외자원 활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협에서는 협동조합을 할 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외 식량을 개발하는 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현지 농민과 정부의 안 좋은 사례 들을 해결하고자 함.
- 공정무역 밀가루, 두부 등 상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다면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확보를 위해 지역 및 전국단위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는 사업 등을 고려하고 있음.
- 국제적인 상황에서, 농협에서 제시할 방법으로, 한국의 농협 모델을 UN summit을 통해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 중 대부분이 그 국가의 농민이 아닌 경우가 많음. 각 나라의 농민단체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주산지에 투입하고, 주산지에서 기술을 배워가고 생산하여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수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음.

- 소농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를 할 때 보면 소농이나 가족농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소농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제 논의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 2020년도에 한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양이 1,200만 톤인데, 이러한 양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임.
- 작년 코로나19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매우 증가한 바 있음.
- 코로나가 발생하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출금지를 내릴 수도 있음.
- 주요 수입국에서는 정부 위주의 대량 구매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코로나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사실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음. 다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긴 하였음.
- 지금보다 더한 곡물 가격 폭등, 수출국의 수출금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악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필요한 상황임.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의 경우 유통 시설일 뿐인데, 만약 비상시 반입 요청을 하였을 때 재고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으며, 수출국의 수출금지가 내려지면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 식량안보를 위해 1) 생산국에서의 유통채널 재고 보유, 2) 국내의 비축물량 보유 이 두 가지가 주요 정책일 수 있음.
- 정상회의의 취지, 목적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개도국 등에 어떤 식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함.
- 민간기업 해외자원 활용 등 포스코에서 트레이드하는 양의 30% 이상은 아프리카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곡물 관련 민간회사와 정부 ODA 사업 등을 정상회의에서 어필하였으면 함.

[시민사회 단체 의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자급률은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한정적 국토에서 높일 수 있을까? 자급률이 적절한 수치인가? 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밀을 10%로 늘리면 이것이 어떤 이득이 되고, 충분한 수준인가 등에 대해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음. 정말로 적절한 수치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었으면 함.
- 실질적으로 자급률을 높였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그 국내산에 대해 소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자급률을 높인다는 것은 국내산 농산물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산 농산물의 강점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자급률 상승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내 생산의 비중이 너무 매몰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
- 일정 품목의 자급률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이것이 원활한 정책인가 의문임.
- 지역 내 생산에 대한 기획과 기획생산 등이 모이다 보면, 큰 범위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함.
- 지역단위 선순환 체계가 너무 도농(서울 등 대도시)을 중심으로만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역단위로만 보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도 듭.
- 도시 중심의 선순환 체계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함.
- 과일, 채소, 축산과 관련해서는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는데, 채소의 경우 재배시기가 짧아서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있으나, 과일이나 축산의 경우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그동안 국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수입이 많아지는 등 과일이 식량안보에서 보았을 때 등한시되지 않았으면 함.
- 또, 축산물의 경우 환경을 강조하다 보면 축산 농가를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국내산 축산물의 수급 물량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생산자 단체 의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 사람 관련 고민은 계속 지속하였으면 함.
-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생산자들도 밀이나 콩 등에 대한 재배면적을 높여가고 있으나,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의 방향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등한시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 시작된 대규모 밀 생산의 경우 현재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지역 내에서의 순환만 일어나고 있는 수준임.
- 이에 대한 이유로 시장을 들 수 있는데, 초기에는 자금심으로 시작하고 정책도 지원이 있었는데, 차츰 시장과 정책 등에서 외면을 받다 보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중장기적인 계획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게다가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를 생각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경우 최근에는 공감도, 가치 등에 많이 움직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생산 규모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정책이 꾸준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소득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최초 정책 자금에 대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잠깐 왔다가 가는 등 지속 발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했으면 함.
- 생산자 단체에서도 국가의 푸드플랜 사업이나 푸드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생산에서도, 유통에서도, 폐기에서도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석하였으면 함.

- 농업계 정책이 항상 농업계 내에서의 정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 및 부처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많은 참여가 필요함.
- 특히, 유통단체, 연합회 등도 함께 토론했으면 함.

[관련 국제기구 의견]

(WFP 한국사무소장)³⁾

- 우선 식량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국제 위기에 관해 이야기해보면,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 세계 기아 인구가 9억 5,700만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식량 위기가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에서 쌀을 세계 취약층, 난민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5만 톤을 시리아, 라오스를 추가하였음.
- 수혜자들의 반응을 보면 수혜자의 94%가 만족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쌀로 300만 명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점진적 확대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함.
- 포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태극기를 보며 항상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함께 60개국에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적 경험을 접목(새마을 운동)한 바 있는데, 르완다, 네팔,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식량 불평을 극복하는 등 실제 제로 형거(zero hunger)를 달성한 바 있음.
- 지속가능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음식물 폐기물 감소 등에 대해 큰 관심이 있음. 버려지는 식량의 경우 1,000조 정도 되며, 이 양이면 충분히 제로 형거를 해결할 수 있음.
- 온실가스의 8%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음.

³⁾ WFP(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기구임.

- 개인으로서는 생활 밀착형으로 탄소중립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이룰 수 있음. 이는 1석 4조가 될 수 있음.
- 제로 웨이스트 제로 형거(zero waste, zero hunger) 운동을 하고 있으며, 잔반뿐만 아니라 잔식 예측 등을 정교하게 하고자 하는 등 개인들이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급식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로 웨이스트 제로 형거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여, 탄소중립 개인 밀착형 모델을 만들고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좌장 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

- 식량자급률에서 생각할 때 6대 품목을 보고 있는데, 과일의 경우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함.
- 과일의 자급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으며, 축산물 소비와 생산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정부 기관 관계자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푸드시스템이라는 것이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음.
- 식량안보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양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은 자급할 수 있는 기반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해외 식품 수입을 고려하고 있음.

- ODA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를 통한 식량 확보와 함께 원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곡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밀, 콩 등의 생산을 기본적으로 계속 올리는 정책을 하는 것이 식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함.
- 채소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해외 부분임.
- 정상회의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외부요인(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큰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국/수입국 입장에서의 위기 공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 각국의 여건에 맞는 계획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의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함.
- 앞으로 모든 토론내용을 국가식량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 비축과 관련하여,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음. 계획을 수립하면 1점, 수립하지 않으면 0점 등의 항목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양곡 계획 등을 고시하고 있음.
- 이코노미스트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알림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쌀, 밀, 콩은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음. 쌀의 경우 약 10%를 비축하고 있으며, 밀과 콩은 물량은 적으나 비축을 하고는 있음. 일단은 국내산을 비축하고 있으며, 수입산 비축은 고민 중임.
- 비축의 경우 민간기업에서도 4~6개월 정도 비축을 위한 선도구매를 활용하고 있음. 비축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쌀 비축과 관련하여 쌀은 지속적으로 과잉인 상태였으며, 과잉으로 인해 농가의 생산의 욕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될 수 있었음.
- 다만, 일정 물량을 국가에서 비축하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370만 톤의 생산량 중 정부양곡이 180만 톤 이상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창고 비용 등도 부담이었음.

- 적정 수준을 80만 톤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80만 톤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처음 겪는 재고 부족 사태에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급 상황을 보면서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재고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함.

3.3. 제2차 국내 논의 종합

개최 방식

- 제2차 국내 논의는 2021년 4월 22일 ‘식량안보’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었음.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산업계 및 관련 협회, 정부 관계자 등 19명이 제2차 국내 논의에 참석하였음.

주요 안건

- 제2차 논의는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① 안정적 식량 공급, ② 자급기반 유지, ③ 위기대응력 강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음.

논의 결과 요약

- ‘국내 자급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농가소득 지원 확대, 적정 자급률 수준 설정, 국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 친환경 농산물 소비 등 가치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또한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농업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됨.
- ‘위기대응력 강화’와 관련하여 국제곡물위기에 대비한 비축 물량 확보, 식량안보 강화 차원의 ODA 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음. 특히 식량안보와 관련된 비상 상황 발생 시 ODA 사업 대상국에서 국내로 안정적으로 곡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대상국 현지 농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강조됨.

-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및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등 ‘한국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인 기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곡물 수출국을 대상으로 국제곡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필요성이 논의됨. 이 외에도 국내·국제 논의 전반에서 ‘소농’, ‘취약농’, ‘고령농’ 등에 대한 논의와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UN에서 제시한 실천경로와 우리나라의 국가식량계획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4. 제3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4.1. 회의 개요 및 진행

4.1.1. 회의 개요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개최 목적: 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 계획 수립
- 일시: 2021. 4. 28.(수), 14:00~16:00
- 장소: OCC오송컨벤션센터 4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시민사회단체,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명 내외

4.1.2. 회의 진행 순서

구성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발제	14:00-14:05	5'	• 인사 말씀	KREI 정은미 박사
	14:05-14:20	15'	•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 국제 논의 및 국내 논의 추진 상황	농식품부 김경은 서기관
	14:20-14:30	10'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내용 소개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중심으로	농식품부 김정락 서기관
2부 토론	14:30-15:55	85'	• 토론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중심으로 ①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②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확대 ③ 지역 내 생산·소비체계 구축	토론자
좌장 정은미 박사	15:55-16:00	5'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KREI 정은미 박사

4.1.3. 주요 사진



4.2. 제3차 국내 논의 주요 토론내용

○ 제3차 국내 논의는 “UN 정상회의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됨.

- 토론 좌장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박사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경은 서기관과 김정락 서기관의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및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관련 내용 소개”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 토론은 학계-소비자-생산자-정부기관 순서로 진행됨.

[학계 및 연구계 의견]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내용임.
-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확대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는 결국 생산의 감소를 가져올 확률이 높을 수 있음. 이는 가격 상승의 결과로 이어질 것임.
- 가격 상승 부분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힘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나 생산자 측면에서는 생산물이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격이 더 높아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일정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잉여 부분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전해질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식량계획 상에서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음식물 폐기와 관련하여, 음식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최근 음식물 포장재의 문제가 더 크게 보임.
- 현재 계획상에서는 음식 포장보다 음식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아서 포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지역 내 소비와 관련하여, 2016-17년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접근 가능한 식품, 외식업체 수는 도시와 비교해 매우 낮은 상황임.

-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내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생산할 수는 없으므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자재 및 식료품들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해외와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기아 해소 및 빈곤 해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

- 순환 경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자원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순환 경제는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경제 체제임.
- 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음.
- UN에서의 지속가능 목표에도 2030년까지 유통에서의 폐기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결국 가식부 폐기를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일 것임.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음.
- 그린딜에서도 농식품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식품 손실 감축, 식품 포장재 감량 등이 포함된 바 있음.
- 식품과 관련해서는 전 주기적인 부문에서 가식부 부분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자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음식물 폐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처리방식 또한 어려운 부분도 있음. 특히, 습식 사료 등의 공장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식 사료도 정체되고 있음(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
-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 음식 폐기물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부분별 폐기와 관련하여 통계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며, 전 주기적인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식품 손실 감축에 대한 전략이 논의되었으면 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편식의 경우 가정식과 비교해 손실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식품 폐기 모니터링이 되었으면 함.
- 제조업이나 외식업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의 특성이 가정식과 다른데, 이렇게 나오는 폐기물들이 자원화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인증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식품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농촌에서의 문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특히 심한 국가 중 하나임.
-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이 5%가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속가능성에서 다루어졌으면 함.
- 국제협력이 다루어진 바 있지만, 우리 농업이 국제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외국과의 공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할 것임.
- 기후 위기에 따른 주제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탄소중립을 다룰 때 식단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식품 구성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등이 외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축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함.
- 농업 부문의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식량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농업 분야 바이오매스의 지역 내 에너지원 활용 등에 대해서 다루면 좋을 듯함.

[시민사회 단체 의견]

(아이쿱생협 센터장)

- 현재 식량계획 관련 보완 내용과 생협의 경험을 통한 확장할만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목표에 보면 10년 후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한다는 목표와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분야가 축산분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친환경 농업의 확산에 있어서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실행방안으로 제안하였지만, 이 또한 농약의 사용을 50% 감축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도전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임.
- 가장 중요한 것이 폐기되는 농산물 및 식품일 텐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과학기술에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예측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
- 작물 조직, 농협, 정부 등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 예측하는 시스템 등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심각하게 식량 계획안에서 고려했으면 함.
-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해 상황에서의 농가 생산 기반 불안전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재해보험 문제, 허들의 하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작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기본소득 등도 중요하지만 재해보험 등 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속가능한 소비 영역에서는 생협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 캠페인을 하고 있음. 매일 1만 5천 톤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데, 식품 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이클의 손실로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임. 낙농업계 등의 일부 반대도 있지만, 지속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살림 전무이사)

-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친환경 농업 확대에 모두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장 목표치 등이 늘 목표치만 제시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EU 등에 비해 목표치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경축순환 농업 등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대책 등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친환경에너지로 바꿀 것인가가 매우 중요함.
- 지역 내 에너지 생산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 되어야 함.
- 경축순환에 대해서 전환을 하겠다 하였지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작은 농가부터 지역단위에까지 여러 층인데 늘 대규모 축산업에만 쏠려있어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속가능한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이 크게 강화되어야 음식물 폐기물 문제, 농업에 대한 자세 등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식생활 교육이 너무 유통 부분에만 맞추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통합 교육되었으면 함.
- 농지에서의 폐기도 30% 이상 되는 등 양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단위 공유 부역 등 전체 시스템에 포함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할 것임.
- 사회적 관점과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앞으로 10년 후 농업에서 청장년들이 중농 수준의 생산을 하는 방안 등 농업 자체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정주 여건에 대한 대책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지역에 사람이 없고 과연 누가 생산을 할 것인지 확실치 않으면 식량계획의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함.
- 농촌의 재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정책에서 기본전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농은 어떻게 정의되며 한국에서 로컬푸드는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는가 등 명확한 전제가 되지 않고 있음. 이미 전제가 되는 부분들도 정부에서 재검토했으면 함.

[소비자 단체 의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생산과 관련된 단계에서 농사짓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바 있는데, 정말로 적절한 양이 잘 생산되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에 대한 파악을 정부가 했으면 함.
- 또한, 축산물에 있어서는 최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감염병을 겪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살처분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가축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국가식량계획에서 논의되었으면 함.
- 유통단계에 있어서 로컬푸드의 확산과 관련하여 공공급식, 학교급식, 지역 내 생산소비 촉진 등이 중요할 텐데, 지역 농산물이 공공급식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이를 위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급식은 잘 되어있지만, 군부대 등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아직 유통체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소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환경적 측면에서 먹거리에 대한 가치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함.
- 친환경제품을 환경이 아니라 너무 건강 차원에서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좀 더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폐기와 관련하여 과연 한국이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고민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실질적으로 나온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대한 시스템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하며, 먹거리나 농산물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 국내 논의가 절차적 과정을 넘어 식량계획 추진에 대한 실질적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함.

-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개념이 2017년에 생성된 개념과 다소 다른 것으로 생각함.
- 지속가능한 소비가 실행되는 체계는 걸어서 15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택배, 쇼핑 등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지만, 폐기물은 더 많이 배출되고 있음.
- 우리 마을 내에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른 폐기물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식량계획이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
- 2017년에서의 지역 푸드플랜 매뉴얼과 국가식량계획 이후의 매뉴얼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임.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도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관점에서 친환경 소비는 생활에서의 친환경화로 생각하고 있음.
- 특히 먹거리와 관련하여 국가식량계획이 선언이 아닌 달성이 되려면 뿌리부터 고려해야 할 것임.
- 친환경 소비를 위해 가격이 장애요인이었는데, 2019년 이후 장애요인으로 꼽는 비중이 줄어든 바 있음.
-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는 95%이지만 생산자는 5%인 상황임. 결국 소비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
- 소비자 즉, 주체를 세우는 일에 지역사회 내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 푸드플랜에서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소비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참여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 소비자를 좀 믿어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음. 소비자가 늘 저울질만 하고 있지는 않음.

[생산자 단체 의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서는 전국 농가들 대부분과 함께하고 있음.
- 많은 회의 자리에서 친환경 농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6, 7년 이상 친환경 농가는 정체기에 있음. 결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다고 생각함.
- 단적인 예로, 국가식량계획을 보면 다른 지표는 다 있는데,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거의 관련 지표가 없는 바임.
- 친환경 농업의 확대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과 관련하여 친환경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유럽의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처럼 30%까지의 목표를 잡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임.
- 관행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시 많은 탄소 감축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논 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크게 중요할 텐데, 공적영역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함.
- 축산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축순환 등의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져야 할 것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 내용으로 보면 식량정책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3~4년 전부터 푸드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최종 목표만 있고 중간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것으로 보임.
- UN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의되었으면 함.

- 폐농약, 폐비닐 수거 등도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음.
- 이러한 오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영농 폐기물의 수거 등에 대해 지역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할 것임.
- 공익직불제가 되면서, 농업인에 대해서 은퇴를 설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69세 이상의 농가에 관행에서 친환경으로 바꾸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음.
- 이런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고령농이 하던 농업을 청년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된 정부 유인책들이 막상 들어가서 보면 별로 많지도 않아서 농식품부에서 명확히 했으면 함.
- 특히, 로컬푸드, 푸드플랜, 푸드시스템, 바우처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과일 간식 등 다양한 사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없고 목표만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정부 기관 전문가 의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계장)

- 군산시는 친환경 생산 관련하여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한 바 있음.
-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나 광역 지자체에서는 운영 주체에 대한 배려, 고민 등이 없어서 필요해 보임.
- 11,000헥타르 중 약 6% 정도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수도작임.
- 친환경 농업 면적을 늘리는 것은 정말 어려움.
- 10년 동안 친환경 농업 농가가 늘어난 수가 크지 않음.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공동경작 등이 필요하며, 농지 소유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음.

- 성토해서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형저수지, 금강 저수지 파이프 연결 등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있음. 이런 것처럼 단지를 조성에서 육성해야 할 것임.
-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지자체의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 안에 생산 담당, 유통 담당, 가공 담당, 로컬푸드 및 식생활 담당, 수매업무 담당 등 직원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일할 직원이 없음. 국가에서 먹거리 종합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해당 내용을 교육받을 사람이 없는 실정임.
- 뽑아놓으면 나가고, 오래 근무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데려가는 등 인재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축에 있어서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 일할 직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연구관)

-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음.
- 소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운송, 보관, 가공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가 쓰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생략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과연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됨.
- 결과는 주어져 있는데 과정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음.
-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는 대부분 공공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과 같음.
- 친환경 공공급식을 기업이나 기관에 모두 의무화했을 때 과연 외식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함.
- 유통생태계에 대한 해답이 먼저 나와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임.
- 실제 소비자에게 조사해보면 친환경 농산물은 비싸다는 의견을 모두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농가 입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고민해야 함.
- 또한 다품목 생산체계로 바뀌어야 지역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다만,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와 관련하여 중소농가의 경우 하우스 안에서 시금치, 부추 깻잎 등을 심었을 때 PLS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운 상황임.
- 국산 농산물 이용을 늘리는 목적에 앞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농산물의 사용 이유로 가격뿐만 아니라 조달 안정성을 드는 경우가 많음.
- 결국에는 가공 외식용 전용 산지 육성 등 기존 채소·과일과 다른 형태의 채소·과일 생산이 필요함.
- 실천하다 보면 농산물 가격은 반드시 오를 텐데, 이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동등성을 어떻게 글로벌 단위에서 확보할 것인지 등 공정무역 등과 연계하여 고민해야 할 것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

- 축산분야 고객이 다양한데 어느 쪽에 맞추어야 할 것인지가 고민이 됨.
- 최근 달걀 가격이 오르자마자 소비자를 위해 수입을 한 바 있는데, 과연 친환경 생산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확신이 서지 않음.
-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축산분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음.
- 농업이 전체 탄소 배출의 2.9% 정도이며, 타 분야에 비해 오히려 적은 수준임.
- 자급률이 40%대, 돼지고기는 60%대이며 나머지는 수입되고 있음. 무조건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과의 논의와 교육이 필요해 보임.
- 가축 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성 등 이를 통한 생산에 대한 인증, 소비 유통과정에서의 좋은 역할 등을 기대함.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

- 식량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관점 중 하위 카테고리인 음식폐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나오는 폐기물들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522만 톤이 연간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만 톤이 줄어듦.
- 최근 5년간 연평균 0.1% 증가하는 상황이며, 가정이 가장 많은 75%이며 처리는 대부분 사료화, 퇴비화하고 있음.
-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폐기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바 있음.
- 종량제를 통해 소비자 인식 전환에 이바지한 바 있으나,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 환경부에서의 방향성을 말해보면, 발생지에서의 쓰레기 감량, 가정용 처리기 보급 확산, 사료화나 퇴비화 이외에도 바이오 가스화 등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음식폐기물 감량 목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관련 국제기구 의견]

(WFP 한국사무소장)

- 음식물쓰레기는 UN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했을 때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의 명확화 및 측정이 중요하며, 선순환 체계가 중요함.
-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아 인구가 올해 9억 5천만 명으로 2억 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생산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양으로 10억 명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탄소 배출량이 많음.
- WFP 서울사무소는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으며, 개인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법이 많지 않지만, 먹는 것에서 먹을 만큼만 먹기 등은 식품 폐기물 감소 등 1석 4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일반 식당에서 zero hunger 메뉴를 만들어 양을 줄여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구내식당에서의 식판 스캐너 및 AI 활용, 학교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음.
- 결국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가정인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앱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 정책이나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정부 기관 관계자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오늘 논의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농식품부 안에서 도 전 부서가 관련되고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부분임.
- 농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지만, 지속가능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인데, 조화를 이루기 위한 생산과 소비는 무엇인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합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나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경종, 축산분야에서의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밀농업 등을 통해 관행에 비해 어떻게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결국 생산은 소비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한데, 소비자들은 친환경 가치를 소비하고, 생산자들은 이에 맞추어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단계에서 활용까지의 단계 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실행력 있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면 UN 회의에 앞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나 시민사회, 생산자단체 등과 같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생각함.
-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 등이 따로 논의하기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 5차 회의 때 모두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3. 제3차 국내 논의 종합

개최 방식

- 제3차 국내 논의는 2021년 4월 28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논의에는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7명이 참석하였음.

주요 안건

- 제3차 논의에서는 ①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② 환경 친화, ③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논의 결과 요약

-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세계 기아 문제 해소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음식물 폐기물류 감축, 농업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경축순환과 탄소저감 인증제 도입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축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
-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 확대’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의 고도화가 요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수매 및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 농업 단지 구축 등

이 방안으로 제시됨. 소비자들의 환경 친화적 소비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는데, 소비자의 자발적 친환경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개인의 노력과 함께 신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의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됨.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청년농 육성,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이 제시되었으며, 농촌 사회의 정주여건 마련과 고령층의 먹거리 접근성 확보 등도 강조됨. 이 외에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업 재해보험 강화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지역 푸드플랜 관련 전문가 육성 등도 함께 논의됨.

5. 제4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5.1. 회의 개요 및 진행

5.1.1. 회의 개요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개최 목적: 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먹거리 접근성 보장’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 일시: 2021. 5. 7.(금), 14:00 ~ 16:00
- 장소: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점 4층 크리스탈홀
- 참석 대상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시민사회단체,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명 내외

5.1.2. 회의 진행 순서

구성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발제	14:00-14:05	5' • 인사 말씀	KREI 국승용 본부장
	14:05-14:20	15' •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 국제 논의 및 국내 논의 추진 상황	농식품부 김경은 서기관
	14:20-14:30	10' • '먹거리 접근성 보장' 내용 소개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중심으로	농식품부 김정락 서기관
2부 토론	14:30-15:55	85' • 토론 :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중심으로 ① 먹거리 통합지원 ② 국민 건강·영양 개선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토론자
좌장 국승용 본부장	15:55-16:00	5'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KREI 국승용 본부장

5.1.3. 주요 사진



5.2. 제4차 국내 논의 주요 토론내용

○ 제4차 국내 논의는 “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먹거리 접근성 보장’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됨.

- 토론 좌장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본부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경은 서기관과 김정락 서기관의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및 “‘먹거리 접근성 보장’ 관련 내용 소개”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학계 및 연구계 의견]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럽에서는 “국민이 잘 먹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음. 다만, 최근에는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먹거리 통합지원 보장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집중했으면 함. 현재 바우처사업 등을 수행 중인데 관련하여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5~10%를 투입할 만큼의 큰 사업이 될 텐데, 본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과감하고 큰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미국 등의 경우 미국 농무부에서 먹거리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바우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지자체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먹거리 통합지원과 바우처의 동시 수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농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과학적 안전성 관리와 심리적 안전성 관리로 볼 수 있는데, 과학적 안전성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새로 나오는 여러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선제 대응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서적 안전성 관리는 국민의 정서에 따라 성패가 나눌 수 있으므로, 소통, 정보 제공, 국민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우리나라의 먹거리 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먹거리 안전성이나 통합지원, 접근성 등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부는 다른 나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임.

- 이미 KOICA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적은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외 농업환경 개선, 생산 후 여유분 제공 ODA 등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광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 현재 수행 중인 다양한 정책의 성과와 관련하여 극대화할 방법은 교육이라 생각함. 현재 내용 속에서 전 국민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이 정책의 성과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함.
-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었을 때 농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책 방향은 너무 따로따로 되어있어,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양 농업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선진국에서도 농식품부 주도로 국민의 농업 관심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TF) 구성,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즉, 교육적 접근이 저변에 깔려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임.
- 농식품부와 교육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국가식량계획 체계에서 식생활 교육이라는 용어가 소비 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식생활 교육이 모든 부분의 저변에서 녹아질 수 있도록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농업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플랫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에 대한 구축과 홍보, 제공이 필요함. 다만, 2018년 이후 진행되었던 것이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플랫폼의 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외국 사례의 모방 이후 단계로 나가야 할 것임.
- 전문인력 양성, 인력의 사후 관리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식량계획에서 취약계층을 영양 섭취 부족자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영양 문제는 영양부족보다는 영양 불균형임.

- 특정 영양소는 과잉, 특정 영양소는 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 영양 불균형에 좀 더 집중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국가식량계획의 중점과제로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 발표 시 강조한다면 좋을 것 같음.
- 영양 플러스사업,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등 식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점이 될 것임.
- 바람직하게 건강을 유지 혹은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계획과 현재 정책의 아쉬운 점은 저소득층과 특정 집단에 한정되었다는 점임. 만성질환 등이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음.
- 단순히 식품 지원이 이러한 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 가진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 식품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조리 장소, 보관 장소 등도 고려해야 함.
- 대상자의 경제적, 신체적 건강, 식품 활용 환경을 고려해야 진정한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선 먹거리 통합지원이 필요함.
- 현물이나 현금지원사업 등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선별 능력, 친환경 및 안전한 식품 지급 시스템 등 각 부처의 유리한 부분들을 활용하여 협업한다면 식량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

- 국가 식량계획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함.
- 먼저, 요즘 정책이 데이터 기반정책인데, 소비자 정책이 횡적 정책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함.

- 국내 8천 명을 조사했더니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생활이라고 응답함. 하지만 40%에서 22.4%로 많이 줄어든 상황임. 이유는 식생활보다 다른 삶의 영역이 점차 커져서 그런 것으로 보임.
- 남성보다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저소득, 1인 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함.
- 식생활은 만족도가 11개 생활 분야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음.
- 가격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Basic needs, 즉 기본 필요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음.
- 수산물과 관련하여 일본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불만이 많게 나타난 바 있으므로 관련하여 안심 먹거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수입산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의 국제 거래지원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리 품목을 점차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전자상거래법이 통과 예정임. 신선식품이든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이든 중요 표시 고지제도 등 나트륨, 영양 정보 등 반드시 표기해야 할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함.
- HMR의 경우 나트륨 문제, 식품첨가물 문제 등이 있으며, 표시 문제가 있음.
-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욱 중요함. 신중년인 50~75세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정책의 창조자 또는 파트너 등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임.

(공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역 아동센터나 단체급식을 하는 아동들의 영양 관리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직원의 위생관리도 하고 있음.
- 현재 주로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와의 협업이 매우 필요함.
- 직원이 모두 영양사이며 영양 및 위생교육을 다 할 수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노인 영양과도 연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노인의 경우 식재료 등의 전달이 반드시 필요한데, 부처 간의 벽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과 같이 전달 체계, 교육과 더불어 자원이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많은데, 관련 자원이 다 다르므로 힘든 상황이며, 교육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풀어내야 할 것임.
- 학교급식 관리는 식재료 전달 문제임.
- 광역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을 1순위로 하고 있음.
- 친환경과 로컬푸드가 부딪히고 있으므로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전통 가공식품을 지정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 플랫폼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고 그동안의 노력이나 자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이 다를 수 있음.
-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무조건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는 연계되어야 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할 것임.

[시민사회 단체 의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서브타이틀로 되어있는데, 여러 격론과 비판도 있었음.
- 식량안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
- UN의 발표와 관련하여,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함.
- 먹거리 보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 UN의 경우 SDGs 등 가치철학이 강조되어 있음. 하지만 균형적인 맥락에서 보면 먹거리 보장이 우선되었으면 함.
-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촘촘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현재는 2번째 쪽지

에 포함되어 있음. 국가식량계획에서 먹거리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치 철학 언급이 필요함.

- 그렇다면 실행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추진체계가 논의된 바 있는데, 유사 사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등 현물 지급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모니터링, 조리 교육 등을 하려면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함.
- 또한 푸드플랜 코디네이터 관련 강사가 필요할 것임.
- 바우처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이 적용될 수 있음.
- 강조점들이 농업·농촌 가치홍보와 관련해서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가 하향식인데, 상향식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 먹거리에 대해서 식품 선택 관련 인력 개발 및 멘토가 필요함.
- 가치와 철학에서 출발한 만큼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며,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함.

[소비자 단체 의견]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 세세한 정책이 많이 있어도, 국민의 행동으로 옮기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며, 관련 대국민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푸드시스템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함.
- 식약처에서 영양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 등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플랫폼과 식약처의 플랫폼이 무엇이 다른지 확인이 필요함.
-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관련 역할이 명확해야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임.
- 일본 자료를 보면, 플랫폼의 중심은 소비자청인데, 명확한 지휘부 및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푸드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민 공감이가 필요한데, 현재 미디어가 빠져 있음.
- 미디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농식품부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국민 개개인이 여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함.
- 먹거리 보장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임. 교과 과정 중 커리큘럼의 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접목할 수 있는 먹거리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개선했으면 함.
- 일반인 대상의 맞춤형 영양 정보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 등은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이용한 접목 사업이 필요함.
- 식품 트렌드에 따라서 보급이 필요할 것인데, 대국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PLS 제도를 통한 화학적 위해요소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생물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가 빠져있음.
- 관리, 법체계 개선이 빠져있으므로 법 개선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임.

[생산자 단체 의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 가야 할 방향으로 공감하며, 생산자로서는 농식품 바꾸쳐, 꾸러미 등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뜻깊다고 생각함.
- 특히나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 항상 불안한 것은 시범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없으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

- 국방부 격리자들의 사진 사례 등 군인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최근 국방부에서 1일 식단을 10,500원으로 상향을 하여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하게 될 수 있을 것임. 관련하여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함.
- 중국 김치와 관련하여 국산 김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1인 가구, 바쁜 현대인, 아동 등 학교에서 과일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국민의 식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으며, 논의 이후에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을 할 건지 고민이 필요함.
- UN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후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정부 기관 관계자 의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 학교급식의 경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함.
- 2010년도 지방선거 이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위생관리 측면에서 해썬(HACCP)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맞춤형 영양교육을 하고 있음.
-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용 영양 식생활 교육을 개발하여 올해 안으로 보급할 예정임.
-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5조 3천억 원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몇 없는 사례일 것임.
- 학교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급식 중단에도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꾸러미를 제공한 바 있음.

-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사례 발굴, 현장 소통 등을 통해 학교급식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식중독 사고 관련하여 미생물에 대한 식중독균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사무관)

- 먹거리 안전 관련 내용은 5차 식품 안전 관리계획에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음.
- 먹거리 안전 부문이 SDGs 5대 실천 분야 중 안전 측면과 부합하고 있음.
- 식약처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공급이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임.
- IT관련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서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 식생활 균형 영양정보의 고도화 작업의 경우 핸드폰 및 어플 등을 통해 진단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세부 추진계획에서 포함될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설명해 드린 내용은 농특위에서 각 부처에 제안해 드린 내용이며, 각 부처에서 세부 내용을 작성 중임.
- 오늘 논의 주제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얼마나 충분하게 공급할 것인가 즉, 농업·농촌의 기본 역할이며,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주제라고 생각함.
- 식품 안전부터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 불균형 해소, 여러 국민들의 먹거리 걱정 해결 등 의미가 있음.
- 오늘 주제의 특성이 한 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일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차원에서 거버넌스 및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교육부든 농식품부든 누가 하든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함.
- 부처에서 고민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면 잘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 과일 간식이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넘어서 통합 바우처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일부 중복되기도 함.
- 건강과 영양 안전성 측면에서 모든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데, 관계 부처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준비하는데 빈틈없이 하겠음.

[관련 국제기구 의견]

(WFP 한국사무소 차장)

- 중점과제가 크게 균형 잡힌 식단, 안전, 접근성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모두 UN 식량계획의 핵심 키워드와 같다고 보임.
- 균형 잡힌 식단의 경우 히든 헝거(hidden hunger, 숨은 기아)를 피하기 위한(영양 불균형) 지원을 하고 있음.
- 안전과 관련하여, 검수 및 검사 결과를 통해서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접근성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시기, 적절한 물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한국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식생활 영양 정보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UN에서 zero hunger 시스템을 통해 식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며(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정책적 제안을 하는 바임.
- 영양 강화식품 등 특수 식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 식품업체도 참여해서 UN의 식량안보 활동에 참여했으면 함.

[좌장 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 제4차 국내 논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자, 2) 먹거리 취약 계층을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3)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 협력 및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4) UN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 녹아 드는 정책이나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요약됨.

5.3. 제4차 국내 논의 종합

개최 방식

- 제4차 국내 논의는 2021년 5월 7일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세부 주제로 하여 개최되었으며, 논의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하였음.

주요 안건

- 제4차 논의에서는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중심으로 ① 먹거리 통합지원 체계, ② 국민 건강·영양 개선,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향후 발전 방향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었음.

논의 결과 요약

- ‘국내·외 먹거리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 과일간식 사업, 임산부꾸러미 사업 등의 예산 투입 확대와 본 사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이 외에도 해외 농업환경 개선 및 원조 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NGO의 협업, 먹거리 전문 현장인력 양성, 먹거리 공급과 교육의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됨.

- ‘국민 건강·영양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교육,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과 커리큘럼 확대, 미디어와의 협력 및 먹거리 관련 슬로건 마련 등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 또한 기존에 강조되어 왔던 ‘영양섭취 부족’의 문제가 아닌 ‘영양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위해요소 등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농식품의 생물학적·화학적 안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심을 위한 안심 먹거리 정보의 제공, 먹거리 관련 소통·참여 확대 등이 제시됨. 또한 최근 들어 미생물 위해요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등이 강조됨. 이외에도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에도 생활 속에 녹아드는 먹거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6. 제5차 국내 논의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6.1. 회의 개요 및 진행

6.1.1. 회의 개요

- 주최: 국회(이개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개최 목적: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일시: 2021. 6. 1.(화), 14:00~16:00
- 장소: 여의도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

○ 참석 대상 : 국회,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농특위,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5명 내외

6.1.2. 회의 진행 순서

구성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발제 사회자 KREI 박성진 박사	14:00-14:05	5' • 축사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
	14:05-14:10	5' • 축사(영상)	UN FAO 탕 성야오 소장
	14:10-14:15	5' • 인사 말씀	KREI 원장
	14:15-14:25	10' • UN 푸드시스템 국제 논의 현황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14:25-14:35	10' •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 현황 : 1~4차 회의 결과 등	영상, KREI 황윤재 박사
	14:35-14:45	10'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소개	농특위 홍근형 팀장
2부 토론 좌장 김홍상 원장	14:45-15:55	70' • 토론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③ 먹거리 접근성 보장	토론자
	15:55-16:00	5'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KREI 김홍상 원장

6.1.3. 주요 사진



6.2. 제5차 국내 논의 주요 토론내용

- 제5차 국내 논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개최됨.
-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의 축사, UN FAO 탕 성야오 소장의 축사 및 국내 논의 의장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의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동향”,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박사의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 현황”,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팀 홍근형 팀장의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소개”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의장 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임.
-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서 UN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임.

[생산자 단체 의견]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 종합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함.
- 세 가지 논의 중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였으면 하며, 과거 식량이라는 콘텐츠에서 최근 소비 선택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 종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 최근, 식량 작물 중 밀, 콩의 자급률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 다만, 밀의 자급률을 높였을 때 뒷받침되어야 할 관련 수급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는 가격, 유통, 가공 관련 산업이 포함됨.
- 콩 같은 경우 나름 소비가 저변화 되어있지만, 타 작물과의 연계성 등은 더 고민이 필요함.
- 최근 영양의 불균형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교육과 홍보로 맞춰갈 수 있는지는 농식품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 식생활 교육, 농업농촌 교육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현장학습이나 농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와 교육부에 해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논의에서는 반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생산조직의 수급 안정 활동을 공정거래 위반(가격 담합)으로 보기도 하는 등 현장과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여 해결을 한 후 목표치를 만들어 추진했으면 함.
- UN 푸드시스템이 국민이 안정적인 먹거리에 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현장과 목표치의 괴리를 해결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 식량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생산자 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합리적으로 세워야 함.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진행된다는 판단하에 전농이 참여하지 못한 바 있음.
- 식량안보, 안전한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생산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생산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인가 고민이 됨.
- 농특위에서도 농정 틀 전환을 이야기하였지만, 과연 달라지고 있는가 반성이 필요함.

- 근래 농가소득이 다소 높아진 부분에 대해 농업 소득은 비슷한데, 농외소득이 늘어난 바 있으며, 결국 1.5헥타르 미만의 농가의 경우 농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임. 이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
- 1%, 2% 정도의 데이터만으로 농정을 이야기하기에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이후에 유럽 등에서 가짜 농민에 대해 고민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4년의 농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생산자 조직화가 필요한데, 농산물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농민이 관여하기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방안이 있다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임. 다만, 실제로는 생산자 조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생산자 조직화는 구호나 문서에만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은 어려우리라 생각함.
- 안정적 식량 공급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식량 자급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만, 현재 21%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축산 및 전체적 농산물 수급과 관련하여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 생산연계성 가격보존 직불을 확대하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소득 기반 등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 지속성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전소득 등 소농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생산자 조직화 등은 생산자 단체와 정부의 합리적 협력 체계와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앞으로 농특위 등을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먹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복지, 교육적 차원 등 생산자가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비자가 생산자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함.

- 그동안 농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선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생태계 등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함.
- 생산자는 적절한 규모의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산지 폐기 등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환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화학적 요소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하여 농업의 환경 저해 요소를 어떻게 공생하며 해결할 수 있을지 생산자가 고민해야 할 것임.
- 소비자는 쓰레기 절감 등을 통한 적절한 규모의 소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일회용품, 재사용 등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서구화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 악영향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정부도 취약계층 지원, 대북 지원 및 ODA 등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비대면 거래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적절한 생산 연령이 농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현재 농업인 평균 연령이 평균 70세인데, 아무리 논의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농업인이 오지 않으면 도루묵임.
- 적절한 농업 수익 발생과 보장이 필요함. 현재 평균 소득이 1,2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농업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임.
- 가계 경제에 맞는 농산물 가격도 따라야 할 것인데, 농산물 수급을 통한 가격 결정이 필요할 것임,
- 식량안보 및 자급률 확보를 위한 농지면적 확보도 필요함. 우리나라의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업데이트하여 통계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식문화, 체질 개선을 위해 교육이 필요함.
- 바우처,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안정적인 소비 마련이 필요함. 소비가 정체되는 경우 농산물은 폐기될 수밖에 없음.

-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논의를 통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9월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UN이 국내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것은 논의 과정을 통해 국가별로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농업계 내에서도 생산과 소비의 적절한 균형이 있을 때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 현장에 있는 생산자로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생산자, 청년,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계획 중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먹거리 불균형 해소 영역에서 더 확대되어 도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민, 거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코로나로 인해 농촌의 농가 또한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확대 되었으면 함.
- 청년 세대와 관련한 2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국내 식량 생산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정말 시급한 문제임.
- 현재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이 단발성으로 실시되며, 유입과 비교해 유출이 더 커지고 있음.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임.
- 청년 세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윈스톱 제도가 부족하므로 보완이 필요함.
- 두 번째는 청년 세대의 먹거리 문제임. 청년 세대가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식습관 및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음. 즉석식, 간편식 등을 선호하는데 신선식품, 건강식품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
- 지금 청년 세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가는 상황에서 식습관이 급하게 변화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급식 등 공급체계가 있으나, 청년 세대는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임.

- 푸드시스템에서 생산자 관점에서 저탄소 농법 및 친환경 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의 책임, 인증, 불이익, 손해 등도 모두 농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 귀농 세대의 경우 스마트팜이나 농산업 분야로 치중이 되고 있음.
- 앞으로 시작되는 창업 농가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가가 우선 고려되고 선택될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홍보나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친환경 인증 마크가 일반 다른 마크와 통합이 된 이후로,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고 생각함. 다양한 혼란이 발생됨.
- 저탄소 인증의 경우에도 친환경 인증과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생산과 소비 등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가 이러한 구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친환경, 저탄소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결이 다르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국제적 논의에서는 소농, 여성농 뿐만 아니라 청년농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농협경제연구소 팀장)

- 생산자 관점에서 국제적인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
- 전 세계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과 함께 푸드시스템에서 생산자 목소리를 키우는 방안을 고민하는 중에 참여할 방안을 고민하였음.
- 논의 결론은 국내 논의과정에서 되도록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결과물을 노출하고 실행해야 할 생산자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하였음.
- 실천 방안들이 나오면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 등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의 결과물에 포함되었으면 함.

- 개도국에서 한국에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음. 개도국 입장에서는 소농에 대한 정책적 보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부족한 상황이며, 국제무대에서는 아직 한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협의 마트 사업을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이윤, 시장충격의 완충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배워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음.

[소비자 단체 의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용어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되는 것이 아님. 과거부터 지속해서 논의하고 필요하다고 주장됐음.
- 과거 생산, 농림부, 우리나라 등이 논의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 즉, 전 부처, 전 세계가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함.
- 주제와 관련하여 나왔던 논의에 대해 동의하지만 덧붙이자면,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자급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적인 생산 면적, 농업인 수에서 적절한 자급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먹거리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자급률이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안정적 수입 등이 필요할 텐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수입품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생산되어 수입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안정과 관련된 기준들은 많지만, 수입 농산물의 지속가능성 담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는 어떤 개념일지 고민하였는데, 지금 이 시대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의 개념을 적립할 때 여러 이해관계자가 논의하였으면 함.
- 친환경 생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를 하기 위

해서는 농업의 가치 등에 대해 교육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방법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임.

- 소비자들은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함. 정확하게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생산자, 소비자 간의 소통에 있어서 정보의 객관화가 필요하며, 수입 자체의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에 대한 고민, 물 발자국 등 여러 국제 논의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더 확장될 것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 이렇게 당사자들이 지속해서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청년 소비자가 당사자에서 빠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함.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손에서 선택될 것인가가 있음.
- 이전과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에서의 소비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이를 위한 소비자의 불편에 관심 가져야 할 것임.
- 소비자가 불편한데, 내 소비가 탄소 배출을 더 할 것인가, 내가 소비하여 쓰레기가 발생 하는가 등에 대해 불편해함.
-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이러한 불편을 줄여주었으면 함.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쓰레기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 감소도 포함되고 있음. 먹거리는 더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 푸드시스템 구축과 국가 식량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소비자는 구매 전 과정을 고려함. 지역 먹거리 선호, 저탄소 생산방식 선호, 폐기과정에서 거절할 권리가 필요함.

-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걸어서 15분 내의 먹거리 구매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소비 트렌드이며,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임.
- 국가식량계획,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이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9월 정상회의 이후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함.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 농특위에서는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바 있음.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바 있음.
- 생산비 보장, 수급의 문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문제로 공공급식의 확대를 보았음.
- 생애주기별 먹거리 지원 전략을 검토하였는데, 현실들을 반영한 계획들을 촘촘히 짜는 것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함.
-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어린이 결식률이 매우 증가했다고 하는데, 위기시기에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통합 돌봄 논의 속에서 먹을거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로서는 이를 가격으로 보고 있음. 가격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렴한 도시락 정도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면 함.
-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 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음식물 폐기 감축, 일회용품 줄이기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국가의 통합적인 정책이 없으면 이행되기 힘들다고 생각함.
- 생산에서의 노동력, 농지 문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단계별 전략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연차별 계획 등 현실 가능한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물, 토양 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현대인들의 경우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며, 서밋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관련 국제기구 의견]

(WFP 한국사무소장)

-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기아 인구, 위기 기아 인구가 급히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분쟁, 코로나 팬데믹의 형거(hunger) 팬데믹으로의 전환 등이 원인임.
- 20개국은 대 기근의 위기에 처하는 등 급박한 상황임.
- 그나마 단비는 우리 농식품부의 쌀 전달로 생각함.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 한쪽에서는 기아를 겪고 있고 한쪽에서는 폐기되는 양이 20억 명을 살릴 수 있는 등의 상황임.
-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zero waste, zero hunger를 추진하고 있음.
- 세 가지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먹을 만큼만 먹는 제로 형거 메뉴, 구내 식판 스캐너를 통한 잔식 및 잔반 감소, 휴대전화 앱을 통한 폐기 감소임.
- 일시적 캠페인에서 벗어나 문화의 변화가 필요함.

[학계 및 연구계 의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유통 및 제조, 외식 등도 관계되지만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음.
- 단지 이런 이벤트에 대비하기 위한 구호나 캠페인이 아니라 실천될 수 있는 정부의 투자 계획 등이 같이 있으면 함.

- 해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도 관련되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연대가 중요할 텐데, 이를 실천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다른 제조, 외식업자 등의 연대가 필요한 것 같음.
- 식생활 교육도 중요할 텐데, 이번 기회에 좀 더 본격화되었으면 함.
- 우선, 기존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새롭게 나온 것들을 구별하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실제로 실천이 되었으면 함.
-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화, 환경 고려 등 공익프로그램의 확충 기회로 삼는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임.
- 또, 윤리적 소비, 로컬푸드 운동 등 소비자들의 자발적 운동 등 정책적 기반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함.

[정부 기관 관계자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 소비자는 환경에 대한 문제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
- 이러한 계획들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 탐색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3가지 주제로 하여, 1) 쌀·밀·콩 등 주식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정부의 역할 등을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으며, 2) 생산 측면에서는 친환경, 소비 측면에서는 음식쓰레기 저감을 보고 있으며, 3) 먹거리 접근성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 농식품 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기존사업과의 정리 등이 포인트가 된 바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차원에서 기아 문제를 많이 다룬 바 있음.
- 농업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할 텐데 물, 에너지 등 탄소 배출 활동이 늘어나고 환경오염을 통해 생산이 감소하는 등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된 바 있음.
-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확실하며, 국내, 국제적으로 합치된 의견을 내기 힘들지만, 많은 의견이 모여 이를 통해 논의하고 향후 공감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주신 여러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의견을 지속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마무리 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논의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각 영역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판단과 함께 희망의 단서를 본 것 같음.
- 4%의 생산자 96%의 소비자 등 더 실천적 논의로 갔으면 좋겠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높이는 노력이 정부의 제정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서로에 대한 이해, 소비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의 정보 생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일 것이며, 합리적인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6.3. 제5차 국내 논의 종합

개최 방식

- 제5차 국내 논의는 그간의 4차례 국내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논의 중 마지막 순서로 개최됨. 논의에는 국회,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시민 사회단체, 국제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하였음.

주요 안건

- 이번 논의에서는 국내 논의 과정 전반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됨.

논의 결과 요약

-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 농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식량 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입의 필요성이 강조됨. 특히 생산자단체에서는 국내 밀 생산 확대를 위한 가격보장, 유통 및 가공 지원, 소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농지면적 확보, 국내 생산 인력 확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이 외에도 공공급식에서의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비 보장 및 수급 안정 등이 함께 언급됨.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별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생산자는 적정 생산을 통한 산지폐기 최소화, 소비자는 적정 규모 소비 및 일회용품 사용 자제, 정부는 친환경 농업의 홍보 및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의 가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지역 내 생산·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먹거리 보장’을 위한 논의에서는 영양 부족의 문제가 아닌 영양 불균형 해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며, 영양 불균형 완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보

건복지부의 통합 돌봄 논의 적극 참여 등이 방안으로 제시됨. 또한 농촌 지역의 고령자 및 청년 세대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불균형 해소 필요성도 강조됨.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됨. 이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생산자단체-정부 간의 협력, 생산자-소비자-정부 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특히 청년 농업인 의견 적극 수렴,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과 문제의식 공유, 제조업체 및 외식업체의 향후 논의 참여 등 현장 소통을 위한 창구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됨.

7. 논의 종합

- ‘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실현하고자 하는 UN의 기초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의 국내 논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함.
- 총 5차례의 국내 논의에 연령, 성별,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총 108명이 참여함.
- 제1차 국내 논의는 2021년 3월 30일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어, 향후 진행될 국내 논의 주제와 국내 논의의 의의, 국내 푸드시스템 진단 및 문제점, 푸드시스템의 정의·목적 등이 논의되었음.
- 제2차 국내 논의(2021. 4. 22.)는 ‘식량안보’, 제3차 국내 논의(2021. 4. 28.)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제4차 국내 논의(2021. 5. 7.)는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제로 하여 개최됨. 제5차 국내 논의는 그간의 4차례 국내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개최됨.

- 국내 논의 과정에서 소농, 청년농, 고령농 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최근 기후변화, 환경문제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내 논의에서도 탄소중립 실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친환경농업 확대 등 먹거리와 관련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내 논의에서도 식량안보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짐.
- 국내 논의에서는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안정적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 푸드시스템, 공공적 차원에서의 정책 접근이 제안됨.
- 또한 국내 논의 과정에서 농업 및 기타 다양한 먹거리 분야에서의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해야 하며,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 필요성, ODA사업 대상국에 대한 원조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력 확보가 강조되는 등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위가 격상되면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와중에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됨.

4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 주요 결과

1. 개최 배경

- 푸드시스템은 식품 생산, 가공, 운송 및 소비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단계·활동을 포괄하며, 건강, 환경,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 지역 사회 및 국가 단위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짐.
- 이에 UN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있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
-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국가별로 건강·영양, 교육, 경제, 인권, 안보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함.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나은 푸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2021년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의 일환으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소집함. 이에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모여 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7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전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Pre-Summit), 2021년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의(2021 UN Food Systems Summit)를 개최함.

2. 사전 정상회의 및 정상회의 개요

2.1.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 개요

- UN은 9월에 개최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년간 회원국·민간 등 다양한 주체 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을 조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정상회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사전 정상회의를 개최함.
 - 사전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아이디어, 계획 등을 공유함.
- 사전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본부(이탈리아 로마)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진행됨. UN 193개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민간단체, 농업인, 농식품 업계 등이 참석함.
 - 이탈리아 총리를 포함한 1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 110여 명의 장관급, 유엔 사무총장 등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이 현장 또는 영상으로 참석함.
 - 정상급 인사는 유엔 사무총장, 이탈리아 총리, 르완다 대통령, 아이슬란드 총리, 스리랑카 대통령, 콜롬비아 영부인, 피지 총리, 우루과이 부통령, 코스타리카 부통령 등, 주요 유엔기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 등이 참석함.

○ 사전회의의 주요 행사는 크게 ①각료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연설과 ②푸드시스템 관련 핵심적인 28개 주제별 논의로 구분되어 진행됨.

〈표 4-1〉 UN 사전정상회의의 주요 일정과 논의 주제

일자	한국시간	일정(주요 논의 주제)			
7.26. (월)	16:00~18:00	◦ 개회식			
	18:30~21:20	◦ 분야별 세션 - 과학·혁신 - 기아 종식 및 영양 - 식량, 기후, 생물다양성			◦ 각료급 연설
		농생태학			
	22:00~24:00	◦ 기념식			
24:30~02:20	◦ 분야별 세션 - 토크쇼 - 청년 - 생산자			◦ 각료급 연설 (계속)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푸드시스템과 영양 (CFS지침) - 연구				
7.27. (화)	16:00~17:50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분야별 세션		◦ 각료급 연설 (계속)
			- 금융	양성평등·여성	
			혁신	인권	
	18:30~20:30	건강한 음식	공평한 생계	회복력	
	22:00~24:00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민간부문	시민사회	
- SMEs			- 향토 푸드시스템		
24:30~02:20	- 후속조치	G20 연계	자금 동원		
		푸드시스템 생계·임금	지역		
7.28. (수)	16:00~18:00	◦ 분야별 세션		◦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 각료급 연설 (계속)
		도시·지역 푸드시스템	학교급식		
	18:30~20:30	◦ 종합 회의			
	22:00~24:00	◦ 폐회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2.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

○ UN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을 계기로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인 2021년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정상회의를 개최함.⁴⁾

-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해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의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함.

○ 회원국, 국제기구 등은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commitments)을 발표하고, 유엔 차원의 이행점검 방안을 제시함. 첫째 날(9월 23일)에는 이해관계자 총회, 사무총장 개회 발언 등과 국가 발언 및 이해관계자 발언, 국제기구 발언 등, 둘째 날(9월 24일)에는 국가 발언과 폐회 선언이 이루어짐.

〈표 4-2〉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주요 일정

	뉴욕시간 (한국시간)	주요 내용
9.23.	09:00-11:00 (22:00-24:00)	이해관계자 총회(People's Plenary)
	11:30-12:30 (24:30-01:30)	개회(사무총장 발언 등)
	13:00-16:45 (02:00-05:45)	국가 발언, 이해관계자 발언
	17:00-18:00 (06:00-07:00)	국제기구 발언(후속조치 등)
	18:00-22:00 (07:00-11:00)	국가 발언
9.24.	09:00-13:00 (22:00-02:00)	국가 발언, 폐회

3. 사전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

3.1. 주요 결과 및 우리 정부 주요 활동

○ 사전 정상회의의 본격적인 개최에 앞서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첫날 기념식에서 9월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각료급 회의·연설에 참석한 장관들은 공통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또한 주제별 논의에서는 소농·여성·청년·토착민(indigenous people)

4)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는 당초 1일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보다 많은 국가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틀로 연장하여 개최됨.

의 식량·토지·금융 접근성 제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 및 인권, 지구 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y), 협력구조(거버넌스)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

- 우리 정부는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료급 연설을 통해 우리 푸드시스템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써, 위기에 대비한 국내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고,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로 전환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함.
- 또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푸드시스템 전환 방향에 맞도록 ‘국가식량계획’과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하고 원활한 무역, 지역단위 생산·소비,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 전환, 스마트농어업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제안함.

3.2. 사전 정상회의 세부 내용

3.2.1. 1일 차 세부 내용

가) 개회식과 패널토론

- 2021년 7월 26일 16시(한국시간)에 Amina Mohammad 유엔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UN과 국제기구 대표와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이 있었음⁵⁾. 유엔 사무부총장의 기조연설 후 ‘테이블 위로 모든 재료 가져오기’와 ‘2030년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됨.

⁵⁾ 주요 참석자는 Amina Mohammad(유엔 사무부총장), David Nabarro(다이얼로그 자문위원), Elizabeth Nsimadala(독립논의 대표), Joachim von Braun(과학그룹 의장), Saleemul Huq(액션트랙 5 의장), Anne Nuorgam(이해관계자 대표), Mari Pangestu(세계은행 개발정책 및 파트너십 이사), Beatriz Argimon(우루과이 부통령), Gerd Müller(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장관), Peter Bakker(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 기업협의회(WBCSD) 회장), Estrella Penunia(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 농민협회(AFA)), QU Dongyu(FAO 사무총장), Gilbert Houngbo(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David Beasley(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Inger Andersen(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Agnes Kalibata(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임.

- ‘테이블 위로 모든 재료 가져오기’ 패널토론에서는 식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모두 수렴될 수 있도록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다이얼로그를 발족하였고, 지난 18개월 간 약 10만여 명이 참여하여 푸드시스템의 미래를 탐구하였으며, 203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금번 회의에서 공유되는 일련의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실천을 가속화해야 함을 강조함.
- ‘2030년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패널토론에서는 2030년까지 농식품시스템을 전환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이 시급하며, 야심찬 전환을 위해 정책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함.
 - 이 외에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협력, 기아 종식을 위해 세계가 지닌 전문성과 자원의 제대로 된 활용과 함께 ODA를 넘어선 혁신적 금융 모색과 전통적 공여자가 아닌 민간부문 및 국내 재원으로부터의 조달 필요성을 강조함.

나) 분야별 세션-1

- 과학 및 혁신, 기아 종식 및 영양, 식량·기후·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이라는 3중 과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농생태학, 함께 바꾸는 푸드시스템-현재와 미래를 위한 청년 행동의 분야별 세션 토론이 18시 30분부터 21시 20분까지(한국시각) 진행됨.
- 과학 및 혁신 분야는 ‘생명과학, 디지털 과학 및 농경학의 혁신’, ‘기아종식 및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위한 과학’,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과학·조직 혁신’의 세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됨.
 - 생명과학, 디지털 과학 및 농경학의 혁신 토론에서는 푸드시스템 혁신을 위한 가장 효율적 실행방안으로 과학자, 정책입안자, 기업, 농업인,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간 지식공유와 소통을 강조하고,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함. 또한, 생명과학과 디지털 혁신 간 융합뿐만 아니라 과학·혁신과 정책·제도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함.

- 기아 종식 및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위한 과학 토론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과 아동 인구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영양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의 권익 신장이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여성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또한,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현대 농업 기술 간 접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농업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과학·조직 혁신 토론에서는 푸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과대학 커리큘럼에 과학 기반 내용 반영 및 농과대학 학생들과 농업인 간 상호 연결을 통해 농업과 과학을 접목해야 함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투자가 요구됨을 강조함.

○ 기아 종식 및 영양 분야에서는 푸드시스템의 숨은 비용이 환경과 빈곤층의 건강 및 생계에 영향을 미쳐 기아를 영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인센티브 제공과 투명성 및 책임성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하며, 보다 공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화로운 행동과 정부의 우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또한, 성공적인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아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우선순위 분야에 맞는 맞춤형 개입이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감하고, 기아 종식에 관한 투자 및 파트너십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행동연합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함.

○ 식량·기후·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이라는 3중 과제 토론에서는 식량 중 40%가 섭취되지 않고 낭비되는 한편 8억이 넘는 세계 빈곤 인구, 그중에서도 식량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빈곤 문제에 농지 황폐화, 산림파괴·온실가스 배출·생물다양성 손실 등 푸드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 남획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역전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복원과 SDGs를 위해 협력 및 행동 가속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기존의 푸드시스템은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및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표명함. 또한, 농업부문에서 민간 소유가 60~70% 이므로 민간부문이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이해관계자임을 강조하며, 농업부문에서의 연구 혁신은 필수이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국가위주가 아니라 지역 위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함.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농생태학 토론에서는 2019년 발표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고위급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제시한 ‘농생태학의 13대 원칙⁶⁾’을 소개하고, 13대 원칙에 근거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동참을 촉구함.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농생태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액션트랙과 연관되어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임을 강조하고, 농생태학 및 재생농업을 통한 전환 행동연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함께 바꾸는 푸드시스템-현재와 미래를 위한 청년 행동 토론에서는 청년이 미래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청년에게 지속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금융, 기술, 훈련, 청년 고용 증대 등 청년을 농업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⁶⁾ 농생태학의 13대 원칙은 재활용, 투입재 사용량 감소, 토양보전, 동물보전 및 복지, 생물다양성, 시너지, 경제적 다각화, 지식의 공동 창조, 사회적 가치와 식단, 공정성, 연계, 토지 및 천연자원 거버넌스, 참여임.

다) 기념식과 글로벌 타운홀 회의

- 기념식은 7월 26일 22시(한국시간)에 Qu Dongyu FAO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대표, 그리고 Paul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 대주교 등을 비롯한 민간부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⁷⁾

- 기념식에서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아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30년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을 존중하는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재원을 비롯하여 농민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과 토착민·청년·여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함을 지적함.

- 또한, 기아 종식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푸드시스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소농과 가족농의 전통 지식, 그리고 이들의 자원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함.

- 이후 진행된 글로벌 타운홀 회의에서는 ‘필요한 주요 변화(Transition) 가속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과 시민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푸드시스템이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환적 행동과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각국 대표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공정한 식품 사슬, 녹색 전환, 여권 시장, 디지털화, 공공정책 및 지원 재정비, 민간부문 투자 녹화(greening),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 증대, 그린딜의 생물다양성 및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 유기농 행동계획 등 자연 친화적인 농업정책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풍요

7) 주요 참석자는 QU Dongyu(FAO 사무총장), Mario Draghi(이탈리아 총리, Paul Kagame(르완다 대통령), Antonio Guterres(유엔 사무총장), Paul Gallagher(교황청 외교장관 대주교, 고위급 발언), Amina Mohammed(유엔 사무부총장), Gerd Müller(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장관), Mauricio Guevara Pinto(온두라스 농축산부 장관), Martien van Nieuwkoop(세계은행 그룹 전문가), Janusz Wojciechowski(EU 농업담당 집행위원), Yugratna Srivastava(UNEP 청년 연락관/UNFSS 챔피언), Myrna Cunningham Kain(토착민 자치 및 개발 센터(CADP) 의장), Jeffrey Sachs(SDG 자문), Agnes Kalibata(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등임.

로운 미래 도모,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 토착민의 전통 지식과 더불어 유엔 토착민 권리에 대한 선언에 포함된 토지, 자원 등에 대한 권리 존중을 강조함.

- 또한, 현 푸드시스템이 다국적기업, 강대국의 자연에 대한 무책임성과 빈곤층의 인권 침해에 기반함을 지적하며, 인간 존엄성과 주권 및 경제권에 대한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조정된 노력과 공동 비전을 향한 재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라) 분야별 세션-2

- 기념식과 글로벌 타운홀 회의 이후 ‘미래 푸드시스템을 향한 농민, 어민, 목축민 및 기타 생산자의 목소리’,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융합-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자발적 가이드라인’, ‘파트너십 및 연구’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이 이루어짐.
- 미래 푸드시스템을 향한 농민, 어민, 목축민 및 기타 생산자의 목소리에서는 농어민과 목축민 등 생산자들이 푸드시스템 전환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모든 행동연합의 중심에 생산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식품을 공급하는 농어민 등이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시켜야 하며, 가치사슬 내 공평한 힘과 가치의 분배와 더불어 생산자들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전수, 투자, 기업가적 역량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융합-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CFS 자발적 가이드라인 토론에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CFS 지침을 즉각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제는 약속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임을 명시함.
 -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의 심각한 식량 상황에 따라 회원국의 합동 노력으로 푸드시스템을 변화시킬 대담한 포부가 필요함을 강조함.

○ 파트너십 및 연구 분야 토론에서는 푸드시스템 혁신을 위해 민관협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지역-글로벌 모든 수준에서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함.

-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책이며,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혁신과 정책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혁신은 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3.2.2. 2일 차 세부 내용

가) 각료급 라운드테이블과 후속 조치 및 검토

○ 7월 27일(2일 차) 16:00~18:10 (한국시각)과 22:00~24:15까지 진행된 각료급 라운드테이블(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에서는 각국의 국내 논의 성과 및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과 푸드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방안이 논의됨.

- 각국을 대표하여 참석한 각료들은 자국의 상황과 SDG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발표하였고, 특히 여성과 청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함은 물론 기후 회복 탄력성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자연·자원 보존, 투자, 정부의 식품 정책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

○ 이후 01:00~02:30까지 진행된 후속 조치 및 검토 분야에서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2030년 SDGs 달성을 향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모멘텀(momentum)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및 검토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서약에서 행동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플랫폼과 정책도구의 효과적 활용과 로마소재 기구(Rome-Based Agencies: RBAs) 간 협력 및 유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푸드시스템 전환에 관한 이행을 위해서는 다자시스템, 즉 유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고, 더 많은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재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와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분야별 세션

- 분야별 세션 토론은 16:00~02:20까지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됨. 첫 번째 세션은 ‘금융’, ‘혁신’, ‘양성평등·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은 ‘건강한 음식’, ‘공평한 생계’, ‘회복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세 번째 세션은 ‘민간부문’, ‘시민사회’, ‘SMEs(Small & Medium Enterprises)’, ‘향토 푸드시스템’을 논의함.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G20 연계’, ‘자금동원’, ‘푸드시스템, 생계·임금’, ‘지역’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함.
- 금융부문에서는 보다 나은 금융, 보다 나은 식품-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지원할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함. 금융은 푸드시스템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푸드시스템에서는 소농 및 중저소득국을 위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표명함.
- 양성평등·여성부문에서는 푸드시스템 내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푸드시스템에서의 여성 권한 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토지, 금융서비스, 디지털기술 등의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정치적 권한 부여, 여성의 생계 소득 및 적절한 일자리 보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 혁신부문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주도 혁신 촉진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수준의 식품 시스템 혁신이 어떻게 주도되고 있는지, 왜 협력해야 하는지, 왜 정책을 중심으로 혁신하여야 하는지, 왜 주변 파트너십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지 등을 사회적 및 제도적 혁신을 중심으로 국가가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함.
- 인권 부문에서는 인권-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현재 전 세계 20억 명은 식량 접근성이 없으며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가 심화됨에 따라 식품 생산자들의 취약성과 빈곤이 증가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식량 접근성 보장, 차별 철폐, 인권보호,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 건강한 음식 부문에서는 “음식의 힘-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위하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건강하지 않은 식단은 질병, 조기 사망 및 지구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생산되는 식품의 1/3이 손실되거나 버려지는 것도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치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
- 공평한 생계부문에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푸드시스템 내 공평한 생계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푸드시스템에서 생산, 유통, 가공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소농, 여성·청년층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강조함. 공평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로컬푸드시스템의 중요성, 여성·청년층 지위·역량 개선, 노동자 권한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보장, 기술·과학 혁신, 소비자-농업인, 민간-공공, 국가 간 등에서의 다양한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됨.
- 회복력 부문에서는 취약성·충격,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푸드시스템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소속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회복력 구축을 위한 방안, 실행 및 성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추후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COP26을 계기로 기후변화-푸드시스템 연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⁸⁾
- 민간부문에서는 적당한 일자리 및 임금 제공, 토양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 활용 농가 지원, 농가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 디지털 기술 및 금융 부분의 혁신 등을 통해 푸드시스템 변화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함.
-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 받아들이기-독립논의에서 나온 시민사회 경험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가, 지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시스템 변화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고, 시민사회는 국가나 지방 정책을 취약한 지역으로 유인하는 핵심이며, 식량안보나 영양 관련 문제에 청소년, 농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함.

⁸⁾ COP26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임.

- SMEs 부문에서는 진정한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혁신, 회복력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와 네트워크의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함. 또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로 빈곤 감소를 위한 시장 통합 및 공급사슬 강화, 소외층을 위한 경제적 기회, 혁신 및 선도, COVID-19 충격에 대한 복원력 증대, 보다 나은 식품을 위한 옹호이며, 농민·소비자·중소기업 등이 디지털 시장에 모여 지역 푸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향토푸드시스템 부문에서는 원주민 푸드시스템: 세계 푸드시스템을 위한 해결책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원주민들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이 강조하고, 금번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계기로 원주민 권리 증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G20 연계 부문에서는 마테라 선언(Matera Declaration)에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까지-신규 행동연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마테라 선언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이 우선순위로 떠올랐으며 현재의 심각한 빈곤, 영양부족, 식량 접근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및 공유된 약속의 필요성을 제기함.
- 자금 동원 부문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공공개발은행(Public Development Bank: PDB)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2회 공공개발은행의 공동금융정상회담(Finance in Common Summit of Pubic Development Banks)을 맞아, 공공 부문, PDB, 민간 투자자, 농민단체와 함께 농업에 대한 공식 재정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PDB가 농업과 식품에서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투자를 확대할 방법이 논의되고, 소농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푸드시스템, 생계·임금 부문에서는 푸드시스템에서 100% 생계 소득 및 임금 창출을 위한 동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푸드시스템에서의 농가 생계 소득 및 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 소득 설정,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동 연합 결성, 농가의 생산성 증진, 소득 다양화 및 기술, 금융, 투입재 등의 자원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지역부문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역적 경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역의 식량 낭비 및 빈곤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 지역, 국가의 행동을 비롯해 공동의 비전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국가 수준의 시장 규제, 복원력을 위해 소농, 여성, 청년이 활발히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3.2.3. 3일 차 세부 내용

가) 푸드시밋과 리오(Rio)협약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푸드시밋과 리오협약 각료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의장이 리오협약과 푸드시스템 전환과의 관계, 시너지, 연관성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관련 각료들이 답변함. 이후 리오 협약에서 채택된 주요 환경협약 사무총장들이 발언함.

나) 분야별 세션

- 분야별 세션은 ‘도시·지역 푸드시스템’, ‘학교급식’, ‘블루 푸드(수산식품)’를 주제로 진행되었음.

- 도시 및 지역 푸드시스템에서는 도시 및 지역 푸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 보호 및 회복력, 음식물 쓰레기 및 손실 감축, 학교 급식, 식품 환경 등 푸드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도시와 청년의 역할 등이 강조됨.
- 학교 급식 부문에서는 학교급식 행동연합: 모든 아동을 위한 영양, 건강 및 교육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학교급식의 회복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영양, 건강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WFP와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타 국가의 더 많은 참여를 촉구함.
- 블루 푸드(수산식품) 부문에서는 푸드 서밋을 건강, 풍족함, 생태학적 복원을 위한 블루 푸드(수산식품)의 완전한 통합으로 이끌기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푸드시스템에서 블루 푸드(수산식품)의 가치·역할을 강조하고, 블루 푸드(수산식품) 논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소규모 생산자, 여성, 청소년 등) 참여, 다방면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이 논의됨.

다) 종합회의

- 종합토론은 총 3차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널토론은 의장과 공동의장이 각각 패널들과 이번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에 대하여 총평을 함. 세 번째 패널토론에서 의장은 추가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함.
- 첫 번째 패널 토론에서는 기후, 분쟁, 팬데믹에 대한 푸드시스템의 취약성과 푸드시스템의 도전과제 해결 및 SDGs 달성을 위해 다부처간 수평적 대화와 소외된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 토착민이 토지를 사용 및 소유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청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재정지원, 생산자를 푸드시스템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농촌 여성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등을 강조함.
-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 각료급 라운드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메시지가 많았으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국가와 농어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3일간의 회의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이 외에 토론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 건강한 식품 제공 실현,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실천, 전 세계와의 연합과 협력, 여성, 소농, 민간부문 모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함.
- 세 번째 토론에서는 추가로 발언하고 싶은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고, 진정한 젠더의 평등, 여성의 기본소득 보장, 여성의 임파워링(empowering)과 토지권, 그리고 자원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정보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어린이들의 식이 선택권 보장,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한 기존의 계획, 이행 관리 방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라) 폐회식

- 폐회식에서는 소농, 토착민, 청년, 여성, 민간 등이 함께 푸드시스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현재 조성 중인 7개 행동 연합(기아종식, 학교급식, 식품 손실 및 폐기 등)에 대한 국가들의 참여가 촉구되었으며, 성공적인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후속 조치에 대한 로마소재기구 등 유엔의 의지를 재확인함. 농업방식의 개선은 영양가 있는 식품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시스템의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모든 투자가 지구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됨.
- ‘체계적, 변혁적 행동연합’ 발족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1) 영양 및 기아종식 행동연합, 2) 학교급식 행동연합, 3) 식품 손실 및 폐기 행동연합, 4) 농생태학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시스템 행동연합, 5) 수산식품(청색식품) 행동연합, 6) 생활소득 및 양질의 일자리 행동연합, 7) 회복력 행동연합을 소개하였고, 행동연합의 이행은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행에 있어 금융, 혁신(기술, 데이터), 투명성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 모두가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며, 농식품시스템이 빈곤, 기아 해소를 위한 ‘성장’, 투자를 통한 ‘지식’, 빠른 진전을 위한 ‘효율성’, 정치·경제·환경·문화적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함. 또한, 현재 세계는 긴급 상황에 놓여있으며, 2030년까지 인간 존엄의 문제이기도 한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모든 회원국, 비정부기구 행위자들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4. 정상회의 주요 결과

4.1. 주요 결과 및 우리 정부 주요 활동

-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회원국·국제기구·이해관계자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공유함.
 - 회원국은 ‘국가발언’을 통해 ① SDGs 달성에 기여할 각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 및 ② 관련 국제 실천연합 등에 대한 의견을 발언함.
- 우리나라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상 발언을 통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으로 소개함.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식량계획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강화,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수산물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주요 세부 과제를 설명함. 또한,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이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힘.

4.2. 정상회의 세부 내용

4.2.1. 이해관계자 총회(The People's Plenary)

○ 지난 18개월간 148개국에서의 국내 논의, 1,500여 개의 독립논의 등을 통해 국가, 생산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오늘 발언할 155개국 중 100개국은 이미 푸드시스템 전환 전략을 제출했음을 설명함.

- 정상회의 준비과정을 통해 기아종식과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모두의 열정을 확인한 바, 금번 정상회의를 전환점으로 삼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정부, 민간, 그리고 개개인이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함.

가) 정상회의 작업반 리더 발언

○ 건강한 식이에 대한 접근 부족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으며, 과학그룹이 파악한 푸드시스템을 변화시킬 실천분야(Action Areas)로 모든 이를 위한 영양공급, 자연기반 해결책 및 생산 촉진, 평등한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회복력 강화 및 이행수단을 소개함. 또한, 거버넌스와 연구의 중요성도 강조함.

○ 푸드시스템 논의 전반에 걸쳐 평등 및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꼽고,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국가 거버넌스의 역할도 강조되었으며, 5개 실천경로에 관한 2,0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취합, 검토, 통합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다자간 실천연합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짐. 또한 실천연합이 지식,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과 광범위한 파트너십 및 자원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나)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한 길 제시

○ 미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세 가지 우선순위 1)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및 영양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3) 최취약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포괄적이고 평등한 푸드시스템을 조성하고, 이들 우선순위에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100억

달러 중 일부는 미국의 글로벌 기아 및 식량안보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를 통해 세계 식량안보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다) 실천분야(Action Areas)

■ 영양 공급(Nourish all people)

○ 전 세계 생산 식량의 1/3이 매년 손실 또는 낭비됨. 식품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은 더 나은 기술, 저장, 저온유통체계, 기술지원 등을 필요로 하며, 소비자들은 소비습관 변화와 식품의 가치를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됨. 또한 식품손실 및 낭비 감축 없이 의미있는 푸드시스템 전환은 불가능하며, 식품 손실 감축을 위해 데이터, 기술, 혁신 등을 수반한 다자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됨. 또한 2세 미만 아동의 영양 부족은 발육 저해, 건강에 대한 장기적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모두를 위한 영양가 있고 저렴한 식량을 위한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밖에 건강하지 않은 식단의 영향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관련 실천연합이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관한 비전과 부합되고, 국가들이 인간, 건강 및 환경적 지속가능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 기후 및 자연의 윈-윈(Win-Win)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함.

■ 자연기반 해결책 촉진(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 자연기반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연합들이 소개됨.

- 산림파괴 및 전용 방지 식품공급사슬 실천연합: 각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연합하여 식품공급사슬 내 산림파괴 및 토지전용 방지
- 농식품 공공지원 재목적화(repurposing) 실천연합: 각국이 수십만 달러를 농식품 공공지원을 위해 재목적화할 수 있는 방법 제안
- 토지-담수 넥서스 실천연합: 토지 및 수자원 관리와 보존을 위한 통합 솔루션 개발
- 농생태학 및 재생농업 실천연합: 푸드시스템을 국제, 국내, 지역 수준에서 변화시키기

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농생태학에 관한 실천연합 형성

- 농업생물다양성 실천연합: 식물유전자원의 필수적인 역할 및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옹호
- 자연친화적 생산을 위한 혁신 실천연합: 금융, 사회, 기술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자연친화적 생산을 혁신할 수 있는 우호적 여건 조성
-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연합: 초지 및 가축관리를 위한 자연친화적 경로 개발
- 수산 및 블루푸드 실천연합: 자연친화적이고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산식품의 잠재력 입증
- 토착민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토착민 푸드시스템의 역량 등 귀중한 전통지식을 인정
- 초지 및 대초원 실천연합: 초지 및 대초원의 복원 추진
-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증거 실천연합: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좀 더 정보에 기반을 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 글로벌 토양허브 실천연합: 토양건강을 향상시키는 관행을 채택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모델, 인센티브, 도구 개발

■ **평등한 생계, 양질의 일자리, 권한을 가진 공동체 촉진(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 아프리카가 변혁적인 농업 의제를 위해 녹색혁명 연합을 발족했으며, 아프리카의 번영을 위해 청년 농민 및 기업가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취약성·충격·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 허리케인, 가뭄 등 기후재난에 영향을 받는 각국 공동체를 지원해야 하며, 셰프들이 재난 이후 공동체에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고 소개함.

■ 이행수단 지원(Means of Implementation)

- 2020년 6억9,000만 명이 빈곤에 처해있으며(5년 만에 6,000만 명 증가) 생산된 식품의 1/3이 낭비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해 세계은행이 식별한 8가지 실천분야를 설명함.
- 또한 푸드시스템 전환에 있어 정책, 제도, 파트너십 및 사회적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식품혁신 허브 구축 등을 통한 국가 혁신 생태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음을 소개함. 이밖에 국가 및 영토 수준에서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법 이용 및 지역의 현실과 우선순위 반영의 중요성을 제기함.

라) 이해관계자 자체적인 약속

- 청년, 생산자, 토착민,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푸드시스템을 위한 자체적인 약속을 제시함.
 - (청년) 건강하고 영양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식단 분야에서 푸드시스템을 위한 행동, 옹호, 권한을 강화할 것을 약속
 - (생산자) 지속가능하고 균등하며 복원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위한 행동, 기후복원력 있는 농업, 어류에 가장 피해가 적은 낚시도구 사용, 자연친화적인 생산 시스템 약속
 - (토착민)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보장을 위해 푸드시스템 내 모든 측면에서의 참여를 약속
 - (시민사회) 농민 중심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할 것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음을 보장.
 - (민간부문) 넷 제로(net zero), 자연친화적인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집단적 기업행동, 농민이 양뿐 아니라 작물 품질 및 토양건강으로도 소득이 책정되도록 약속
 - (젠더) 여성이 푸드시스템의 중심에 있을 것을 약속
 - (챔피언 네트워크)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챔피언 간 깊은 대화 및 지속적인 포부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모든 대화 및 토론에 기여 할 것을 약속

마) 종파를 초월한 리플렉션

- 식품이 보편적인 인권에 해당하며 무기가 아닌 평화의 수단임이 강조되고, 충분히 대변되지 않은 푸드시스템 주체에게 정책, 혁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급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를 강조함.

4.2.2. 개회(Official Opening)

- 현지시각 11:30-12:30에 진행되었으며, UN 사무총장, 이탈리아 총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의 발언이 이루어짐.
- 식품이 인간의 기본권이며,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30억 인구가 건강한 식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운데, 20억 인구는 과체중인 역설적인 현실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기존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이 더욱 악화하였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빈층이 되었다고 설명함. 푸드시스템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함.
-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10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은 작물 수확량을 비롯하여 농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 세계적 굶주림 퇴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측면인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푸드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소개됨.

4.2.3. 국가 발언 및 이해관계자 발언

가) 9월 24일 02:00~03:30(한국시각)

- 주요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식량안보 개선과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해 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실천연합(기아종식, 학교급식)과 이해관계자(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DfB),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Science for humanity's greatest challenges: CGIAR),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는 각각의 공약과 포부를 발표함.

■ 국가 발언

- 국가별 중점영역과 실천방향을 밝힌 일본, 터키 등의 리더 발언이 있었으며, 일본은 기아 등 식량과 연관된 전 세계 다양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 생산부터 분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인 푸드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혁신 및 디지털화는 물론 과학 및 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 공정한 자유무역 강화의 필요성, 각 국가 및 지역의 기후 및 식품 문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함.
- 터키는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이 식량 공급과 푸드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하였으며, 코로나19 또한 어렵게 달성한 성과를 저해할 위협에 놓여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친화적 생산, 디지털화 가속, 식품시스템 내 여성과 청년 참여 독려 등을 위해 노력하며, FAO와 함께 식품 손실 및 낭비 방지를 위한 'Save Your Food'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실천연합 발언

- 기아 종식, 학교급식 등의 실천연합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함. 기아 종식 실천연합은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과학과 연구를 통해 터득한 기아를 감축하면서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여 특히 기아가 심각한 곳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외계층, 소규모 농업인, 청년, 토착민 등이 이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분쟁지역에서 식량이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학교급식은 식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소득 이전, 가구 식량안보), 교육(학습 및 여성 교육), 농업(농촌 경제, 푸드시스템), 건강과 영양(식이 다양성 및 증진) 수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및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함. 또한 학교급식 재건,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 지원 확대, 학교급식의 효율성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촉진하는 정부 주도의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촉구함.

■ 이해관계자 발언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식량과 영양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아프리카 기아종식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아프리카에서 추진 중인 노력과 성과가 소개됨. 또한 현재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도전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SDGs 달성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으며,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화된 노력(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푸드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됨.

○ 이밖에 복잡하고 상호연관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변혁을 지원하고, 혁신에 기여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기아종식에 기여하기 위한 CGIAR의 노력이 소개됨.

○ GCF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기금으로써 GCF가 2015-19년 기간 생계 개선,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생태계 건강 증진 등을 지원했음을 소개하고, 2020-30년 기간에는 지원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생태학적 접근법 촉진, 기후정보 자문/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푸드시스템 변혁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나) 9월 24일 04:00~05:45 (한국시각)

○ 블루푸드 및 수산식품 이니셔티브,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AIM For Climate) 이니셔티브 및 공공개발은행(PDB) 이니셔티브가 소개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정에 기반을 둔 다자간 국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함.

- (AIM For Climate 이니셔티브) 미국과 UAE가 주도하는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 (AIM For Climate) 이니셔티브에 최근 새롭게 지지를 표명한 바하마, 방글라데시, 핀란드, 조지아, 아일랜드, 일본, 케냐, 리투아니아, 모로코, 뉴질랜드, 루마니아, 스웨덴, 빌앤델린다게이츠재단, FAO를 소개하며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촉구함.
- (공공개발은행(PDB) 이니셔티브) 농민은 용자, 예금, 작물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공개발은행은 이를 가능케 하는 적절한 재정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푸드시스템을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PDB가 그간 소농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있어 제약이 된 사항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과 혁신을 촉진하고 자본을 조달·배포하는 PDB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4.2.4. 국제기구 발언

- 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과 주요 UN기구에서 푸드시스템의 중요성과 향후 바람직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언급함.
 - 향후 UN 회원국들의 실천을 UN에서 지지할 것이며,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푸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1. 리오협약 이행 지속 2. 농업 지원의 개편(정책 개혁, 투자, R&D) 3. 특히 선진국에서 저렴한 상업적 식품 생산을 추구하며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중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단일 조직이 푸드시스템의 방향을 전환하기는 어렵고, 모든 이해관계자(농민, 소비자, 영양학자, 여성, 토착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안함.
 - 푸드시스템 대전환은 SDGs 달성에 필수적이며, 오늘날의 푸드시스템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충분하고 질 좋은 영양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교육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함.
 - 계층간 영양 불균형이 심하며, 건강·안전·접근 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식품 제조업자의 식품 제조법과 마케팅 방식을 바꾸고 식품의 생산, 포장, 유통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함.

- 지난 2년여 간 기아종식과 기후변화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금융 격차 해결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혁신이 중요성과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4.2.5. 국가발언 및 폐회식

가) 9월 24일 07:00~08:30 (한국시각)

○ 참석자: Elif Bereketli(사회), Agnes Kalibata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Martin Frick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 Taona Kuo 유엔 사무총장실 선임자문(좌장), 주요국 정상 등

○ 주요국 발언: 스페인(Pedro Sánchez 대통령)

나) 9.24. 09:00~11:00(한국시각)

○ 참석자: Elif Bereketli(사회), Agnes Kalibata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Taona Kuo 유엔 사무총장실 선임자문(좌장), 주요국 정상 등

○ 주요국 발언: EU,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멕시코, 영국, 독일

국가	발언자
EU	Frans Timmermans 수석부집행위원장
러시아	Sergey V. Lavrov 외교부 장관
네덜란드	Tom de Bruijin 외교개발협력 장관
프랑스	Jean-Yves Le Drian 유럽·외교부 장관
멕시코	Marcelo Luis Ebrard Casaubón 외교부 장관
영국	Rt Hon Lord Goldsmith 태평양·환경 장관
독일	Gerd Müller 경제협력개발부 장관

다) 9.24. 22:00 ~ 9.25 02:00(한국시각)

○ 참석자: Elif Bereketli(사회), Martin Frick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 Taona Kuo 유엔 사무총장실 선임자문, 좌장, Amina Mohammed 유엔 사무차장(폐회사), 주요국 정상 등

○ 주요국 발언: 남아공, 중국, UAE,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 캐나다

국가	발언자
남아공	-
중국	Tang Renjian 농업농촌부 장관
UAE	Mariam Bint Mohammed Almheiri 식량물안보부 장관
인도네시아	Suharso Monoarfa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브라질	Tereza Cristina Corrêa da Costa Dias 농축산식품공급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Abdulrahman A. Alfadley 환경물농업부 장관
호주	David Littleproud 농업부 장관
인도	Shri Narendra Singh Tomar 농업농민복지부 장관
캐나다	Alexandra Bugailiskis 로마소재기구 상주대표

라) 폐회사

○ 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의 회원국들과 정상회의 특사를 비롯해 회의 개최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와 정상회의 결과가 세계적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또한 향후 국가수준에서의 성과 실현의 중요성과 향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G20, 성장을 위한 영양(Nutrition for Growth: N4G) 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 의제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을 강조함.

5

종합 시사점

- 2015년, UN은 2030년까지를 목표 기간으로 하여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함. UN은 SDGs의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논의할 정상회의를 2021년 9월에 개최할 것을 제안함.
 -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된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음.
- UN은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가 푸드시스템을 점검하고,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논의, 국내 논의, 독립 논의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특히, 회원국별로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UN이 제시한 5대 실천경로(Action Track)를 바탕으로 국내 논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UN 푸드시스템 사전 정상회의(2021.7.26~7.28, 이탈리아 로마)와 정상회의(2021.9.23-9.24, 미국 뉴욕)를 준비하였으며,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 논의 의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선정하고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의 국내 논의를 개최함. 총 5차례의 국내 논의에 연령, 성별,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총 108명이 참여함.

- 국내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2021년 9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함. 또한 국내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에 참석함.
- 연령대별로 31-50세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세 이상 34명, 30세 이하가 9명이 참여함.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가 69명이었으며, 여성 참여자가 39명이었음. 또한 분야별로 교육·연구 분야 전문가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31명, 무역 및 통상 13명, 농업생산 13명, 식품산업 10명, 환경 및 생태 8명 등이 참여함.

○ 제1차 국내 논의는 2021년 3월 30일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어, 향후 진행될 국내 논의 주제와 국내 논의의 의의, 국내 푸드시스템 진단 및 문제점, 푸드시스템의 정의·목적 등이 논의되었음.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향후 국내 논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의 3가지 이슈를 주요 논의 주제로 선정하는 것에 참석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제2차 국내 논의는 2021년 4월 22일 ‘식량안보’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어, 안정적 식량 공급, 자급기반 유지, 위기대응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제3차 국내 논의는 2021년 4월 28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확대 및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됨. 제4차 국내 논의는 2021년 5월 7일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중심으로 먹거리 통합지원 체계, 국민 건강·영양 개선,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

- 국내 논의 과정에서 소농, 청년농, 고령농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탄소중립 실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친환경농업 확대 등 먹거리와 관련한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됨. 또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식량안보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안정적 국내 식량 생산 기반 구축, 지역 푸드시스템, 공공적 차원에서의 정책 접근이 제안됨.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위가 격상되면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농업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물론 ODA 사업 등과의 연계 등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됨.

○ 제5차 국내 논의는 그간의 4차례 국내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개최됨. 제5차 국내 논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됨.

○ UN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국내 논의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5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내 푸드시스템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먹거리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또한 ‘모두를 위한 정상회의’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협력을 촉구하는 UN의 기조를 받아들여, 연령별, 성별, 분야별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함.

○ 다만, 5차례의 국내 논의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국제기구, 기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총 108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농업·농촌 및 식품 등 먹거리 관련한 기업 등 업계 담당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업계의 푸드시스템에 관한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되지 못함. 또한 2021년 7월과 9월에 개최된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

회의 이전에 국내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비교적 짧은 일정,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논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함.

- 향후 국내 정책이 국내 논의 및 사전 정상회의와 정상회의의 성과와 함께 국내 논의 과정에서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추진된다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내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사전 정상회의 개요

1.1. 1일 차 개요

1.1.1. 개회식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16:00~18:00(한국시각)
- 참석자: Amina Mohammad 유엔 사무부총장, David Nabarro 다이얼로그 자문위원, Elizabeth Nsimadala 독립논의 대표, Joachim von Braun 과학그룹 의장, Saleemul Huq 액션트랙 5 의장, Anne Nuorgam 이해관계자 대표, Mari Pangestu 세계은행 개발정책 및 파트너십 이사, Beatriz Argimon 우루과이 부통령, Gerd Müller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장관, Peter Bakker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 기업 협의회(WBCSD) 회장, Estrella Penunia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 농민협회(AFA), QU Dongyu FAO 사무총장, Gilbert Hounou IFAD 총재, David Beasley WFP 사무총장,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 Agnes Kalibata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1.1.2. 기념식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22:00~24:00(한국시각)
- 참석자: QU Dongyu FAO 사무총장, Mario Draghi 이탈리아 총리, 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Paul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 대주교(고위급 발언), 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Gerd Müller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장관, Mauricio Guevara Pinto 온두라스 농축산부 장관, Martien van

Nieuwkoop 세계은행 그룹 전문가, Janusz Wojciechowski EU 농업담당 집행위원, Yugratna Srivastava UNEP 청년 연락관/UNFSS 챔피언, Myrna Cunningham Kain 토착민 자치 및 개발 센터(CADP) 의장, Jeffrey Sachs SDG 자문, Agnes Kalibata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등 발언

1.1.3. 분야별 세션

1) 과학 및 혁신

○ 개최일시: 7월 26일 12:00~13:30(한국시각 7월 26일 19:00~20:30)

○ 참석자: Joachim von Bra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과학그룹 위원장(의장), Magdalena skipper 네이처(Nature)지 편집위원장, Louise Fresco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 총장, Elizabeth Hodson de Jaramilo 콜롬비아 PUJ 대학교 교수, Lee Recht 알레프 팜스(Aleph Farms) 지속가능성 부서장, Manuel Otero 미주농업협력기구(IICA) 국장, Kaosar Afsana 방글라데시 브락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 Claudia Sadoff CGIAR 시스템위원회 매니징 디렉터, Paul van de Logt 네덜란드 외교부 식품·영양안보 부서장, Godfrey Bahiigwa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 농촌경제·농업 부서장, Rita Teresa Telaje Barcinas 광대학교 신규농 육성사업 프로그램(BFRDP) 코디네이터, Mohamed Hassan 개발도상국과학학회(TWAS) 회장, Thomas W. Hertel 미국 퍼듀대학교 농경제학 교수, Su Kahumbu Stephanou 아이카우(iCow) 대표, Patrick Caren 몽펠리에 대학교 국제협력과장

2) 기아종식 달성: 영양가 있고 지속가능하게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18:30~20:30(한국시각)

○ 참석자: Lawrence Haddad 실천경로(액션트랙) 1 의장, Mary Robinson 아일랜드 전 대통령(좌장), Joachim von Bra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과학그룹 의장, Sheryl L Hendriks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대학교 교수(기조연설), Josefa Sacko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 Tereza Cristina Corrêa da Costa Dias 브라질 농축산식품공

급부 장관, 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 Karina Gould 캐나다 국제개발부 장관(고위급 발언), Ndidu Nwuneli 사헬 컨설팅 농업 및 영양 이사, Irish Baguilat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농업인협회(AFA) 가족농 10년 및 여성농민 의제 조정관, Omar Hilale 모로코 유엔 상주대표, Maximo Torero Cullen FAO 수석경제학자, Ute Klamert WFP 사무차장 등 발언

3) 식량, 기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이라는 3중 과제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18:30~20:30(한국시각)

○ 참석자: David Lane Anneberg 신탁재단장(좌장), Johan Rockstrom Anneberg 신탁재단장, Joao Campari WWF 인터내셔널 글로벌식품관행 리더 겸 실천분야 3(액션트랙) 리더, Elizabeth Mrema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Zac Goldsmith 영국 외무·영 연방부 및 환경식품농촌부 장관, Janusz Wojciechowski EU 농업담당 집행위원, Sun Tan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 Florence Jeantet 생물다양성을 위한 원플래닛 비즈니스(OP2B) 이사, Shakuntala Thilsted Worldfish 과학자 겸 2021년 세계식량상 우승자, Rattan Lal 2020년 세계식량상 우승자, Estrella Penunia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 농민협회(AFA) 사무총장 등(발언)

4)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농생태학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20:30~21:20(한국시각)

○ 참석자: Moussa Balde 세네갈 농업부 장관(좌장), Julien Denormandie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 Antonio Francisco de Assis 앙골라 농수산부 장관, Mahindananda Althugamage 스리랑카 농업부 장관, Miguel J. Garcia-Winder 멕시코 FAO 상주대표부 대사, Rachel Bezner Kerr 코넬대 교수, Vijay Kumar UNFSS 챔피언스 네트워크 생산자 부문 부의장, Estrella Penunia 아시아 농업인 협회 사무총장 등(발언)

5) 함께 바꾸는 푸드시스템-현재와 미래를 위한 청년 행동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24:30~01:20(한국시각)

○ 참석자: Victor Mugo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청년 Liasons group 의장(의장), Yugratna Srivastava UNEP Youth Constituency Focal Point(개회사), Marie-Clarie Garf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챔피언, Lana Weidgenant 액션트랙 부의장, Lavetanalagi Seru 액션트랙 부의장, Pramisha Thapaliya 청년 Liasons Group, Jessica Vega 세계 청년 토착민 caucus, H.E. Hailemariam 에티오피아 전 총리, Martin Frick 부특사⁹⁾, H.E. Lawrence Omuhaka 케냐 농업부 장관, Henrietta Fore 유니세프 사무총장, Jane Lowicki USAID 시니어 청년 자문역(토론)

6) 미래 푸드시스템을 향한 농민, 어민, 목축민 및 기타 생산자의 목소리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24:30~01:20(한국시각)

○ 참석자: Elizabeth Nsimadala 범아프리카 농민기구(PAFO) 회장(좌장), Charlie McConalogue TD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장관, Ishmael Sunga 남아프리카농업연맹(SACAU) CEO, Christiane Lambert 농민·농업협동조합연합회(COPA&COGECA) 회장, Reema Nanavaty 아시아농민협회(AFA) 집행위원 겸 자영업여성협회(SEWA) 농업이사, Erin Fitzgerald 미국농민목장주연합(USFRA) CEO, Gilbert F. Hounoubo IFAD 총재, Gordon Bacon 캐나다 두류 및 글로벌두류연합 CEO, Vijay Kumar UNFSS 챔피언 네트워크 생산자 부의장 등(발언)

7)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융합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CFS 자발적 가이드라인

○ 개최일시: 7월 26일(1일 차) 01:30~02:20(한국시각)

○ 참석자: Chris Hegadorn CFS 사무국장(좌장), Thanawat Tiensin CFS 의장 겸 FAO, IFAD, WFP 태국 대표부 대사, Martin Cole CFS 식량안보·영양에 관한 고위급전문가 패널(HLPE) 의장, Hans Hoogeveen FAO 이사회 독립의장, Naoko Yamamoto UN 영양기구 의장, Michael Fakhri 식량권 특사, Rick White 국제농식품네트워크 의장 및 CFS 민간부문메커니즘(PMS) 대표, Gotabaya Rajapakse 스리랑카 대통령, Gabriel

⁹⁾ deputy to special envoy

Bairobe 카메룬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Cornelia Berns 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정책관 등(발언)

8) 파트너십 및 연구

- 개최일시: 7월 26일 18:50~19:30(한국시각 7월 27일 01:50~02:30)
- 참석자: Juan Lucas Restrepo CGIAR 파트너십 및 지원 글로벌 디렉터(의장), Terri Sarch FAO 영국 대사, Martin Fregene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농업부장, Johan Swinnen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글로벌 사이언스 디렉터, Fadel Ndiame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부총재, Florence Jeantet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글로벌 기업연대(OP2B) 매니징 디렉터, Stefan Schmitz 세계작물다양성재단(Crop Trust) 총재

1.2. 2일 차 개요

1.2.1. 각료급 라운드테이블-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1)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6:00~18:10(한국시각)
- 참석자: David Nabarro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다이얼로그 자문위원(의장), Yemi Osinbajo 나이지리아 부통령, Shri Narendra Singh Tomar 인도 농업농촌복지부장관, William D. Dar 필리핀 농업부장관, Ma Youxiang 중국 농업부차관 등

1.2.2. 각료급 라운드테이블-SDG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2)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22:00~24:15(한국시각)
- 참석자: David Nabarro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다이얼로그 자문위원(의장), Kotaro Nogami 일본 농림수산성장관, Jewel Bronaugh 미국 농무부차관, Mariam Al

Mehiri UAE 식품수자원안보부 장관, Julia Klockner 독일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 등

1.2.3. 후속 조치 및 검토 접근법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01:00~02:30(한국시각)
- 참석자: Jeffrey Sachs 컬럼비아대학교 지속가능개발센터장(좌장), Elizabeth Mrema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 Peter Thomson 유엔 해양 특사, Gerbrand Haverkamp 세계 벤치마킹연합(WBA) 이사, Thanawat Tiensin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의장, Hans Hoogeveen FAO 이사회 독립의장, Gilbert F. Hounbo IFAD 총재 등(발언)

1.2.4. 분야별 세션

1) 보다 나은 금융, 보다 나은 식품-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지원할 금융 확대 방안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6:00~16:50(한국시각)
- 참석자: Johan Swinnen IFPRI 사무총장(좌장), Estrella Penunia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 농민협회(AFA) 사무총장, Vineet Rai Aavishkaar 그룹 창립자 및 의장, Tanja Havemann Clarmondial 공동창립자 겸 이사, Wiebe Draijer Robobank CEO, Rodger Voorhies Bill & Melinda Gates 재단 글로벌성장및기회 의장, Geeta Sethi 세계은행 푸드시스템 고문 및 글로벌 리드(global lead) 등(발언)

2) 푸드시스템 내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6:00~16:50(한국시각)
- 참석자: Kawinzi Muiu WFP 의장(의장), Jeminah Njuki IFPRI 여성 권한 강화 담당(개회사), Safrina Dhowre Elba IFAD goodwill 대사, Asa Regner UN Women 부

사무국장(고위급 발언), H.E. Thoko Didiza 남아공 농업부 장관, Beth Dunford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 Lucy Muchoki 범아프리카 농기업 컨소시엄 대표, Rick White 국제 농식품 네트워크 의장, Jessica Vega Ortega 세계 청년 토착민 caucus 공동 회장, Alexandra Bugailskis 캐나다 대사(토론)

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주도 혁신 촉진

(Catalyzing Country-led Innovation to Transform Food Systems)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7:00~17:50(한국시각)

○ 참석자: Sean de Cleene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집행위원, 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Kotaro Nogami 일본 농림수산업 장관, 에티오피아 장관, Mariam al Mheiri 아랍에미레이트연합, Hanneke Faber Unilever, Roy Steiner 록펠러 재단 수석 부사장, Maximo Torero Cullen FAO 수석 이코노미스트, Marije Beens 네덜란드

4) 인권-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통일된 프레임워크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7:00~17:50(한국시각)

○ 참석자: Olivier de Schutter OHCHR AT3 극빈·인권·회원 특사(좌장), Michelle Bachelet OHCHR 대표, Guy Ryder ILO 사무총장, Michael Fakhri 식량권 특사, Wenche Barth Eide 오슬로대학교 명예 부교수, Jan Beagle IDLO 사무총장 등(발언)

5) 음식의 힘-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위하여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8:30~20:30(한국시각)

○ 참석자: Ms. Lana Weidgenant 지속가능 식품섭취 패턴 변화 부의장, Dr. Gunhild Stordalen EAT 재단 설립자(개회사), Dr. Mario Herrero Acosta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수석연구원, Dr. Tedros Ghebreyesus WHO 사무총장(과학적 견해 및 발제), Stefano Patuanelli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Hindou Oumarou Ibrahim 환경운동가, H.R.H. Maha Chakri Sirindhorn 태국 공주 등

6)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푸드시스템 내 공평한 생계

(Ensuring No one is Left Behind: Euitable Livelihoods in Food Systems)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8:30~20:30(한국시각)

○ 참석자: Michelle Nunn Care USA 대표(의장), Cynthia Samuel Olonjuwon 국제노동기구(ILO) 아프리카 지역 Director(기조연설), Lynnette Neufeld GAIN Director(발제), Vasanthi Venkatesh Assitant 영국 원저대학 교수(발제), Florence Egal 식품보장·영양 전문가(발제), Mai Thin Yu Mon CHIRO Program Director(논의), Ramon Laquarta 펄스코 대표(논의), Beatrice Gakubasm Awan-Afrika Executivce Director(논의), Ajay Vir Jakhari Farmers' Forum India Chairman(발제), Lobin Lowe 말라위 농림부 장관(발제), Aylin çağlayan Özcan European Union Director General(Relation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발제), Kundhavi Kadiresan CGIAR Global Engagement and Innovation Managing Director(발제), Lusi Basterra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물부 장관(발제), Marie Haga IFAD External Relations and Governance Department Associate VP(마무리)

7) 취약성, 충격,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18:30~20:40(한국시각)

○ 참석자: Sandrine Dixson 공동의장, Saleemul Huq 공동의장, Ismahane Elouafi FAO 수석과학자, Patricia Espinosa UNFCCC 사무총장, Preeti Sinha UNCDF 사무총장, Sadhan Majumder 방글라데시 식품부장관, Farid Mujawar 예멘 농수산부장관, Gabriel Ferrero 스페인 푸드시스템 대사, Ibrahim Mayaki AUDA-NEPAD CEO, Amir Abdulla WFP 사무부총장, Sharan Burrow ITUC 사무총장, Naoko Yamamoto WHO 사무차장, Patrick Verkooijen Global Center on Adaptaion(GCA) CEO, Sheela Patel Slum Dwellers International, India 창립자, Gram Shimray Asian Indigenous Peoples Pact(AIPP) Director, Geeta Sethi World Bank 푸드시스템 자문, Gonzalo Munoz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

8) 사전회의에서 민간부문 우선순위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22:00~22:50(한국시각)

○ 참석자: Peter Bakker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business council 대표(의장), H.E Gilbert F. Hounbo IFAD 총재(고위급발언), H.E. Gerda Verburg Scaling up nutrition movement 글로벌 코디네이터, Wiebe Drauer Rabobank 이사회 의장, Mark Schneider 네슬레 대표, Ramon Laguarta PEPSICO 대표, Emmanuel Faber OP28 의장, Hanneke Faber 유니레버 식품&음료 대표, Dann Wensing IDH 대표, Cherrie Atlanho AGREA 국제농업시스템 대표, Rick White 국제 농식품 네트워크 의장(토론)

9) 푸드시스템 전환 받아들이기-독립논의에서 나온 시민사회 경험(Leaning into Food Systems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Dialogues)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22:00~22:50(한국시각)

○ 참석자: Christina Skierka Power of all 설립자 및 CEO, Michael Quinn Patton 작가 및 Blue Marble Evaluation, Imelda Bacudo ASEAN 기후 연구 네트워크 소장 (ASEAN-CRN), Francisco Jose Alabi Montoya 엘살바도르 보건부 장관, Bibi Gonzalez Founder and Director·Come Mejor Waik 과테말라, Florence Nakayiwa Planning 우간다 Resources Mobilization and Management 부사무국장, Barbara Stinson World Food Prize Foundation 회장, Lindiwa Sibanda Director and Chair, ARUA Centre of Excellence in Sustainable Food Systems Pretoria, Sok Silo, 캄보디아 Secretary-General for the Council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ul Newnham SDG2 Advocacy Hub Coordinator, Divine Ntiokam 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Climate Smart Agriculture Youth Network(CSAYN)

10) SMEs 우선순위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23:00~23:50(한국시각)

- 참석자: Cherrie Atilano AGREA 농업시스템 인터내셔널 CEO(좌장), Bonolo Monthe Maungo Craft 이사, Ian Randall Wasafiri 이사, Tulsi Giri DV Excellus 공동창립자, Claudia Barona Plantpack by Lifepack 공동창립자, Jian Yi China Action Hub 창립자 겸 SME 및 지속가능한 소비로의 전환 챔피언, Vanessa Adams AGRA 전략적파트너십 부회장, Manuel Otero 농업 협력을 위한 미주기관 사무총장, Andy Zynga EIT Food CEO 등(발언)

11) 원주민 푸드시스템 : 세계 푸드시스템을 위한 해결책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23:00~23:50(한국시각)
- 참석자: Yon Fernandez-de-Larrinoa FAO 원주민 팀(Indigenous peoples unit) 의장(주재), Anne Nuorgam 유엔 원주민 상설 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의장(환영사), Ine Eriksen Soreide 노르웨이 외교장관(기조연설), Alexandra Bugailiskis 주로마캐나다대사(기조연설), Miguel Garcia Winder 주로마멕시코대사(기조연설), Peter Kodwo Appiah Turkson 추기경(기조연설) 등

12) G20 마테라선언에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까지-신규 행동연합을 위한 프레임워크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24:30~01:20(한국시각)
- 참석자: Qu Dongyu FAO 사무총장, Marina Sereni 이탈리아 외교차관, Maximo Torero FAO 수석과학자, Gerd Müller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장관, Syahrul Yasin Limpo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겸 G20 차기 회장 등(발언)

1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수조원 동원하기-공공개발은행의 역할

- 개최일시: 7월 27일(2일 차) 24:30~01:30(한국시각)
- 참석자: Helene Papper IFAD 홍보팀장(의장), Gilbert Houngbo IFAD 총재, Karina Gould 캐나다 국제개발부 장관, Daniele Franco 이탈리아 재무부 장관, Arkhom Termpittayapaisith 태국 재무부 장관, Beth Dunford 아프리카개발은행 부대표 등

14) 푸드시스템에서 100% 생계 소득 및 임금 창출을 위한 동원

○ 개최일시: 7월 28일(3일 차) 01:30~02:20(한국시각)

○ 참석자: Michelle Nunn CARE USA 대표(의장), H.E. Samantha Marshall 엔티가바 부다 농업부 장관(고위급 발언), Diane Holdorf WBCSD 상임이사, Roberto Suarez 국제경영자연합 사무총장, Reema Nanavaty 여성 자영업 협회 이사, Dann Wensing IDH 대표, Mohamed Anouar Jamali OCP AFRICA 대표, Arifin Rudianto 인도네시아 해양자원부 차관(토론)

15)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역적 경로

○ 일시: 7월 27일(2일 차) 01:30~02:20(한국시각)

○ 참석자: Jamal Saghir 맥길대학교 실습교수, 글로벌적응센터 임원 겸 세계은행 전 이사(좌장), Kristina Mattson 스웨덴 기업혁신부 농업식품생산부 부장, Shenggen Fan IFPRI 전 사무총장, Ousmane Badiane AKADEMYA2063 의장, Claudia Martinez 콜롬비아 식량토지이용행동연합 FOLU 이사, Cristell Pratt 카리브태평양지역 아프리카기구 사무차장, Jahad Abdullah Alfathel 식량안보의회네트워크 부회장, João Bosco Monte 아프리카-브라질 기구 창립자 겸 회장 등(발언)

1.3. 3일 차 개요

1.3.1. 푸드서밋과 리오협약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개최일시: 7월 28일(3일 차) 16:00~17:30(한국시각)

○ 참석자: Martin Frick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의장), Marue Beens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부 차관, Lord Zac Goldsmith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 태평양 환경국 장관,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 등

1.3.2. 종합회의

- 개최일시: 7월 28일(3일 차) 18:30~20:30(한국시각)
- 참석자: Martin Frick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의장), David Nabarro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다이얼로그 자문위원(공동의장), Claudia Sadoff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이사, Janusz Wojciechowski EU 집행위 농업위원장, Joao Campari 실천 경로 3 의장 등

1.3.3. 폐회식

- 개최일시: 7월 28일(3일 차) 22:00~24:00(한국시각)
- 참석자: Jeff Koinange(사회), 찰스 왕세자, Agnes Kalibata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Al Mheiri UAE 식량안보부 장관, Anne Nuorgam 유엔 토착민 문제에 관한 연구포럼 의장, Peter Bakker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 기업협의회(WBCSD) 회장, Jewel H. Bronaugh 미농무부 차관, Joachim von Braun 과학그룹 의장, QU Dongyu FAO 사무총장, Gilbert Houngbo IFAD 총재, David Beasley WFP 사무총장, Luigi Di Maio 이탈리아 외무부 장관, Amina Mohammad 유엔 사무부총장(발언)

1.3.4. 분야별 세션

1) 도시 및 로컬푸드 시스템 (City and Local Food Systems)

- 개최일시: 7월 28일(3일 차) 16:00~17:30(한국시각)
- 참석자: Rosie Boycott 저널리스트(의장), Giuseppe Sala 이탈리아 밀라노 시장·밀라노 도시 식량 정책 협정 의장(발제), Mateusz Ciasnocha European Carbon Farmer CEO(발제), Pamela Escobar Vargas Fridays for Future Mexico 공동창립자·C40 Global Youth and Mayors Forum 청년 대표(발제), Asher Craig 영국 브리스톨 부시장(논의), Jane Battersby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 교수(논의),

Marta Suplicy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 사무국장(논의), Yvette Cabrera Food Waste, Healthy People and Thriving Communities Director(논의), Emma Chow Ellen McArthur Foundation Food Initiative 리더(논의), Meti Tamrat 에티오피아 School Health and Nutrition 부문 아디스아바바 시장 고문(논의), Piercristiano Brazzl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회장(논의), 김대영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장(논의), Nancy Roman Partnership for a Healthier America CEO(논의), Jeff Risom Gehl Chief Innovation Officer 파트너(논의), Peter de Franceschi ICLEI Global Food Program 코디네이터(발제), Manuel de Araujo 모잠비크 켈리마네 시장(발제), Betina Bergmann Madsen 덴마크 National Food Procurement Officers Network 의장(발제), Christine Gould Thought for Food 창립자·CEO (발제)

2) 학교급식 행동연합 : 모든 아동을 위한 영양, 건강 및 교육

○ 개최일시: 7월 28일(3일 차) 16:00~16:50(한국시각)

○ 참석자: Carmen Burbano WFP 학교기반 사업 국장(좌장), Valerie Guarnieri WFP 사무차장(환영사), Ville Skinnari 핀란드 개발협력무역 장관, Julien Denormandie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 Moussa Balde 세네갈 농업·농촌인프라부 장관, Jewel H. Bronaugh 미농무부 차관, David Beasley WFP 사무총장(발언 등)

3) 푸드 서밋을 건강, 풍족함, 생태학적 복원을 위한 블루 푸드(수산식품)의 완전한 통합으로 이끌기

○ 개최일시: 7월 28일(3일 차) 17:00~17:50(한국시각)

○ 참석자: Jim Leape 스탠포드 해양해결책 센터 선임연구원 및 공동책임자(의장), Peter Thomson 유엔 해양특사, Ine Eriksen Soreide 노르웨이 외무부장관, Shakuntalal Thilsted 2021 세계식량상 수상자, Arni Matiesen 아이슬란드 오션 클러스터 선임 고문(기조연설), Micheni Japhet Ntiba 케냐 정의부 국내법 사무소 간사장, Barkah Mossae 모리셔스 루이스 항만 허브 글로벌 셰이퍼, Nasser Kamel 지중해연합 사무총장, Sanda Ojiambo UN글로벌콤팩트 국장, Thanawat Tiensin UN 세계식량안보

이사회 태국 상임대표, Mahendra Reddy 피지 농업부 장관, Manuel Barange FAO 수산농업정책자원부 과장, Abigail Rockwell 미 국무부 세계식량안보 과장, Hideki Moronuki 일본 수산청 수산 수석협상가(토론)

2. 정상회의 개요

2.1. 1일 차 개요

2.1.1. 이해관계자 총회

- 개최일시: 9월 23일(1일 차) 22:00~24:00(한국시각)
- 참석자: Agnes Kalibata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환영사), Joachim von Bra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과학그룹 의장, David Nabarro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다이얼로그 자문위원, Christine Campeau 평등한 세계 촉진 액션트랙 및 CARE 푸드시스템 선임 자문위원, Tom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 Samantha Power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처장, Jewel Bronaugh 미국 농무부 차관, Maximiliano Torero Cullen FAO 수석경제학자, Pau Gasol UNICEF 영양 및 아동비만 제로 글로벌 챔피언, José Andrés (월드 센트럴 키친 설립자 겸 셰프, 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 Seane de Cleene 세계경제포럼 집행위원, Steve Chiu 대만 불교재단 불교도, Mairum Husain 북미 이슬람 의료협회 회장 등 발언, Elif Bereketli(좌장)

2.1.2. 개회(Official Opening)

- 개최일시: 9월 23일(1일 차) 24:30~01:30 (한국시각)
- 참석자: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 Mario Draghi 이탈리아 총리, Excmo. Sr. 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발언

2.1.3. 국가 발언, 이해관계자 발언 1

- 개최일시: 9월 24일 02:00~03:30(한국시각)
- 참석자: Guy Parmelin 스위스 연방 대통령, Mohamed Irfaan Ali 기니아 대통령, Yoshihide Suga 일본 총리, Dato Sri Ismail Sabri bin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 Sauli Niinisto 핀란드 대통령, 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 Fancisco Guterres Lu-Olo 동티모르 대통령, Hage G. Geingob 나미비아 대통령, Alejandro Giammattei Falla 과테말라 대통령, 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 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 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Roch Christian Kabore 부르키나 파소 대통령, 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 Akinwumi Adesina AfDB(총재), Melinda Gates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장, Kundhavi Kadiresan CGIAR 이사, Yannick Glemarec GCF 사무총장 등 발언

2.1.4. 국가 발언, 이해관계자 발언 2

- 개최일시: 9월 24일 04:00~05:45(한국시각)
- 참석자: Elif Bereketli 좌장, Emmerson D.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 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 Taneti Maamau 키리바시 대통령, 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Katrín Jakobsdóttir 아이슬란드 총리, 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 Abdel Fattah Al Sisi 이집트 대통령, Nguyen Xuan Phuc 베트남 대통령, 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 Erna Solberg 노르웨이 총리, 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 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 Luis Alberto Arce Catacora 볼리비아 대통령, Juan Orlando Hernández 온두라스 대통령, Muhammadu Buhari GCFR 나이지리아 대통령, Prayut Chan-o-cha 태국 총리, 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등

2.1.5. 국제 기구 발언

- 개최일시: 9월 24일 06:00~07:00(한국시각)
- 참석자: 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 Achim Steiner UNDP 사무총장, Henrietta Fore UNICEF 총재,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 David Beasley WFP 사무총장, Gilbert Houngbo IFAD 총재, Qu Dongyu FAO 사무총장

2.2. 2일 차: 국가발언 및 폐회식

2.2.1. 9월 24일 07:00~08:30 (한국시각)

- 개최일시: 9월 24일 07:00~08:30(한국시각)
- 참석자: Elif Bereketli(사회), Agnes Kalibata(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Martin Frick(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 Taona Kuo(유엔 사무총장실 선임자문, 좌장), 주요국 정상 등
- 주요 회원국: 스페인

2.2.2. 2021. 9.24. 09:00~11:00(한국시각)

- 참석자: Elif Bereketli(사회), Agnes Kalibata(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Taona Kuo(유엔 사무총장실 선임자문, 좌장), 주요국 정상 등
- 주요 회원국: EU,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멕시코, 영국, 독일

2.2.3. 2021. 9.24. 22:00 ~ 9.25 02:00(한국시각)

- 개최일시: 2021. 9.24. 22:00 ~ 9.25 02:00(한국시각)

- 참석자: Elif Bereketli(사회), Martin Frick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 Taona Kuo 유엔 사무총장실 선임자문(좌장), Amina Mohammed 유엔 사무차장(폐회사), 주요국 정상 등
- 주요 회원국: 남아공, 중국, UAE,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 캐나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참고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s://www.korea.kr>〉, 검색일: 2021. 9. 30.

임팩트라이브러리, 〈<https://impactlibrary.net>〉, 검색일: 2021. 10.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국제연합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웹페이지, 〈<https://food-systems-summit.krei.re.kr>〉, 검색일: 2021. 10. 5.

United Nations Food System Summit 2021 웹페이지, 〈<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검색일: 2021. 10. 6.